



희망리포트

2016-02

바꾸자대학 프로젝트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유혜승 · 이은지



희망리포트

2016-02

[바꾸자대학 프로젝트]

불안한 청년, 대학을 말하다

유혜승 · 이은지

[바꾸자대학 프로젝트]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연구책임 유혜승 (희망기획팀 연구위원 | hsyoo@makehope.org)

공동연구 이은지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jlee@makehope.org)

목차

연구요약	7
I. 서론	14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질문	
3. 연구방법	
II. 선행연구 검토: 신자유주의 대학과 대학생	26
1. 대학의 팽창과 고등교육의 시장화	
2. 청년층의 구조적 불안과 대학	
III. 한국 대학의 현실: 청년의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	38
1. 대학 내 교육권 실태	
2. 학생복지와 사회권	
3. 대학 내 민주주의	
4. 청년의 불안을 재생산하는 대학	
IV. 학생이 꿈꾸는 대학	60
1. 청년이 기대하는 대학의 역할	
2. 대학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V. 대학 변화의 주체와 방법	72
1. 혁신 주체에 대한 인식	
2. 학생사회의 탈정치화: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	
3. 학생자치 가능성의 탐색	
VI. 결론	88
참고문헌	94
표 목차	
[표 1-1] 심층면접자들의 특성	24
[표 1-2] 포럼위원 · 자문위원	25
[표 4-1] 주요 대학별 졸업요건	71
그림 목차	
[그림 1-1] 대학 나온 청년층 취업률	33
[그림 1-2] 2014년 청년실업률	34



연구요약

연구요약

○ 한국은 고등교육이 보편화 · 대중화되어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달성한 사회지만, 깊은 배움이 이뤄져야 할 대학공간은 최근 십여 년간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에 휩쓸려 문화적인 격변을 겪었다. 학생은 ‘소비자’로, 대학교육은 마케팅되어야 할 ‘상품’으로 규정되었다. 취업률을 절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주도로 ‘산업수요 · 취업중심 교육론’을 통해 대학 내 기초학문을 구조조정을 하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즉, 최근의 추세는 대학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넓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과 이윤추구 논리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들은 과연 현재 한국 대학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기업화 및 상업화 추세는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집중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조차 어려운 세상에서, 한국 대학이 겪고 있는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학 스스로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청년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지닌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봄으로써, 최근의 변화들이 대학교육의 질, 학생의 권리 및 복지, 이들의 삶과 생활세계 등 대학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학생 대부분은 대학교육에 대해 고등학

교와 별다른 차이점을 느낄 수 없는 “얕박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대형강의가 점점 늘어나고 수업의 다양성과 질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은 대학수업의 의미를 ‘학점 취득’으로 축소하고 있다. 대학은 고등학교 때 이들이 경험했던 입시교육만큼 치열하고 경쟁적인 곳이 되었고, 대학 안에서 교양과 학문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 역동성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겪는 실질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은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은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복지는 대학운영에서 그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대학 진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 이로 인해 각종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을 위해 대학은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복지의 문제를 학생 개개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게끔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소한 복지 기회조차 단과대, 학과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학생복지’가 학생 구성원 모두가 대학 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일정한 생활수준과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정책적 · 제도적 체계를 의미한다면, 학생들의 지적은 현재 대학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적인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학생 복지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 대학 내 민주주의는 어떠할까. 급격한 기업식 구조조정을 경험한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학내 민주주의에 대해 학교 측의 ‘노조탄압식’ 학생통제로 인해 자발적인 학생활동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학 내 이슈를 공론화하고 여론화할 장조차 부재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학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표면적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은 점차 '침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 무엇보다 대학은 '불안'의 공간이 되었다.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함께, 취업준비와 직결되지 않는 활동을 했을 때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과 그 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문제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러한 대학생들의 '불안'에 편승하거나 이를 재생산하면서, 개개인이 '자도생'의 방식으로 이러한 불안에 대응하게끔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리는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대학의 문제-교육권, 학생복지, 사회권, 대학 내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러한 간극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취업과 아르바이트 등 먹고사는 문제에 바쁜 탓일까. '수저계급론'까지 등장한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 그들을 그저 순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 학생들이 대학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었다. '파편화된 학생사회'와 '취업준비로 인해 다른 문제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는 현실'. 그리고 '어차피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냉소적인 태도'. 이 같은 이유들은 학생들에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문적 교양과 비판적 지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연대감을 습득하지 못한 채 오로지 개인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면서, 기성질서에 대한 순응과 복종의 태도만 양산되고 있다. 효율을 앞세운 '개혁'과 자율을 중시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학생들은 대학 내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알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성 질서에 순응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면담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①먹고사는 문제(취업과 학점), ②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③파편화된 개인주의, ④레드콤플렉스, ⑤무관심 · 무관계의 다섯 가지 원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사회의 탈정치화 현상은 현재 대학문제의 ‘원인이자 결과’를 동시에 드러내며, 현실의 악조건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면담 대상 학생들은 대학이 시민을 양성하고 깊은 학문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자신 역시 대학생이지만, “어떻게든 취업시켜 달라”고 외치며 이미 대학의 ‘달라진 공기’에 익숙해진 다른 학생들의 모습을 한탄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닌 학생들은 한국사회에서, 대학사회에서 ‘특이’하고, “요즘 애들 같지 않은” 학생들로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학 내부의 모습을 설명할 때는 마치 본인이 관찰자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이 자주 발견됐다.

○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은 더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암울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본래 의미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희망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은 오늘날의 대학은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안의 조건을 이해하고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학은 사회의 다양한 ‘권리’를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을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로 인해 다양한 사회진출의 가능성이 획일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많은 학생이 대안적인, 지속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대학에서 보여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학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주체는 학생-자기 자신-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학의 문제를 자신이 당장 개입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자치조직과 학내 공론장을 형성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 이런 활동이 불러올 잠재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의 소산물’이라고 평가받는 중앙대 학생들의 ‘자유인문캠프’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희대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등은 각기 운영 주체와 방식은 다르지만,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며 대학의 공공성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 커뮤니티 내에 만연한 학생들의 불안과 답답함, 특히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학생들조차 획일적인 사회진출 경로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문제에 개입하는 한 가지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기존의 획일적인 사회진출 경로를 강화하는 ‘취업지원센터’가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며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와 대안적인 삶을 꿈꿀 수 있게 하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이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진출’을 꿈꾸고 있으나 대학을 다니며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할 기회가 없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이들을 위한 대학 내 장치로서, ‘직업적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과 신설을 제안했다. 학생들에게 확장된 직업적 상상력과 어떠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몇 가지 지표만 따라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지금 소용돌이에 휘말린 대학의 개혁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이처럼 ‘보다 다양성 높은 사회진출 방법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측면에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맹목적인 취업교육정책과 이에 대항한 인문교양 강화 사이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진출 교육’으로서 대안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당장 청년들이 겪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는 않겠지만,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모두가 획일적인 경로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취업불안을 어느 정도 상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 이러한 작은 실천과 개입을 통해,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학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측면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그 해결이 어렵지만, 같은 이유로 대학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학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대학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현재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분석했다. 대학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과 처방 없이는 청년들의 대안적 삶과 사회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질문
3. 연구방법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대학은 사회의 양심이나 비판자라기보다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니퍼 위시번, 2011, 『대학주식회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재고만 쌓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되겠다. 취업률 같은 사회적 요구도 매우 중요하다.” (한양대학교 이영무 총장, 『동아일보』, 2015.03.31.)

우리는 고등교육이 보편화 · 대중화되어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달성한 사회에 살고 있다. 1980년대까지 30% 미만이었던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대 이후 정부의 대학정책과 맞물려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83.3%로 최고점에 도달했다.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두둑한 보수가 보장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이유로 갈수록 오르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꼽는 가정도 많다. 그러나 대학교육에는 근본적으로 이보다 훨씬 큰 사회적 의미가 있다. 희망제작소가 2015년에 발간한 「희망리포트: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이야기하듯,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에게 대학 시절은 단순히 취업준비 기간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깨닫고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시간이다(유혜승 외, 2015).

이처럼 더욱 깊은 배움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할 대학공간은, 최근 십여 년간 문화적인 격변을 겪었다. 대학이 학생을 교육하는 방식에서부터 대학이 하는 일을 일컫는 개념 및 용어에 이르기까지, 대학을 둘러싼 많은 것이 변화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의 흐름에 휩쓸려 대학 본부는 학생을 ‘소비

자'로, 교수를 '계약노동자'로 규정하고, 교육과 연구를 하나의 '상품'이라고 정의했다(제니퍼 위시번, 2011). 이들은 브랜드화나 마케팅에 관해서 이야기 하며, 신문과 지하철에 대학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학의 상업화 경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앙대와 성균관대처럼 기업이 직접 대학을 인수해 소유 · 지배하면서 대학교육에 기업식 경영철학과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 역시 생겨났다. 이들을 포함한 많은 대학은 연구 성과물을 판매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적재산으로 전환하는 데 열을 올렸다. 교수임용 평가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스승으로서의 자질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지원금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능력과 논문실적으로 대학평가 순위에 도움이 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대학평가 역시 졸업생의 취업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는 이러한 대학교육의 사유화 경향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혁신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출간한 『대학 혁신: 7대 유형별 전략』은 이런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에서 규정하는 대학의 존재 이유는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책은 대학이 “시장 수요자로서 학생을 바라보면서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졸업생, 연구 성과의 수요자인 기업 · 정부 등을 포함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류지성 외, 2006:24). 이런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맞닥뜨린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철저한 성과중심의 교수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시스템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학 내 각종 서비스를 아웃소싱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미국처럼 쇼핑 포 클래스(shopping for class)”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겨레, 2015.03.06). 이들이 제시한 대학 전략은 현재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현되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기업으로 대표되는 시장의 영향력이 확장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과 신자유주의적 대학 교육정책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최근 이같은 변화의 흐름은 단

순히 대학의 취업률을 절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주도로 ‘미스매치론’과 ‘산업수요 · 취업중심 교육론’을 통해 기초학문을 구조조정하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한 예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5년 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학생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관심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적 수요와 대학이 양산하는 졸업생이 양적, 질적으로 매치가 되지 않는데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중략)… 지금처럼 모든 대학이 인문대학을 하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이 정책으로 실현되면서,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전국의 대학이 이런 구조조정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윤지관, 2015). 점점 “돈을 벌거나, 돈을 연구하거나, 돈을 끌어들이는” 분야는 번창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은 쇠퇴하고 있다(Engell & Dangerfield, 1998; 위시번, 2011: 18에서 재인용). 즉, 교육부와 기업은 한목소리로, 대학이 학생의 가치관을 넓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과 이윤추구 논리에 맞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교육의 이러한 추세는, ‘학생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의 대가로 대체 무엇을 돌려받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은 연구설계를 위한 사전인터뷰에서 현재의 대학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날이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컴퓨터실로, 근처 피시방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듣고 싶은 수업의 정원은 90명인데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포함해 250~300명의 학생이 나보다 먼저 신청이라도 하면 1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수강신청을 해도 강의실은 콩나물시루 같고…(중략)…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수업 시작하기 15분 전에는 강의실에 도착해서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고, 늦게 가는 날이면 뒤에 앉게 되어 교수님들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서울 소재 사립대학 2학년 생 인터뷰 중, 2015.06.30)

또한 한 대학원생은 “(교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논문을 쓰고 지원금을 많이 따오는 것이 중요하지, 강의와 교육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시간 낭

비로 치부하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답했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더 있다. 2010년 대학교원의 36%를 차지하던 비정년 트랙의 전임교수가 2012년에는 거의 절반(49.1%)에 육박했으며, 비전임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 역시 2015년 현재 평균 37.9%로 증가했다(이상룡, 2015:107). 또한, 2015년 현재 대학 전임교원의 연간 1인당 논문 게재 편수는 평균 0.6편(국내), 0.4편(국제)이며, 한 사립대의 경우 논문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해 교수의 업적평가를 하고 있다(대학알리미, 2015). 이처럼 교원의 불안한 고용구조와 논문 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한국 대학에 기대하는 교육의 가치인가?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 한 명이 내는 평균 연간 등록금은 667만 원이다. 또한, 그동안의 등록금 추세를 살펴보면, 2001년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230만 원,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77만9천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국공립대의 경우 409만2천 원, 사립대는 733만4천 원이었다. 14년 만에 등록금이 총액 기준으로 국공립대는 77.9%, 사립대는 65.2% 증가했다(머니투데이, 2014.02.14). 이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비 가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인산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학생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 그 결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규모는 2015년 말 10조7천억 원으로 4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700만 원이 넘으며, 학자금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생 수는 2015년 말 2만 명을 넘어섰다(이데일리, 2015.09.02). 이런 정도의 경제적 희생을 고려한다면, 모든 대학생은, 마땅히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¹⁾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대학의 상업화를 진전시키는 것

1) 또한, 한국의 대학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대학이라는 공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지원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부는 매년 국내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2조7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연구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봤듯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등록금 및 주거비, 생활비로 큰 비용을 저축하거나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학을 둘러싼 구조개혁 흐름을 대학의 주체인 학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대학교육의 질, 학생의 권리 및 복지, 학생의 삶과 가치관 및 생활세계 등 대학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삼성경제연구소가 주장했듯,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이 과연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특히 이 연구에서는 대학 현실에 괴로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 외부가 아닌 대학교육 그 자체, 학내 구성원들의 실천을 통한 내부혁신을 모색하고, 기업 담론이 지배적인 대학 담론 지형에서 이에 대항할 대안 담론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²⁾하는 것이 이 연구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이다.

2. 연구질문

이 연구는 한국 대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양상의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정부의 대학교육정책 등 대내외적 압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학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그 배경과 기제, 구성원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십여 년간 진행된 대학의 개혁은, 대학 내 권력관계 및 대학문화 재편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학생 간 · 교수 간 · 학과 간 경쟁시스템의 도입 등 대학 내의 제도적 변화들은 대학이라는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공간을 하나의 영리기업 또는 취업학원과

2) 많은 연구는 대학의 독립성이 한 사회의 민주주의적 문화 확산에 핵심적 가치임을 주장했다(Giroux, 2009). 대학교육은 학생들이 공적 삶(public life)에 근본이 되는 사회적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한 사회의 민주주의적 문화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이 한국사회의 공적인 경제 · 문화적 자산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를 바 없는 공간으로 재편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가치를 상실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대학교육은, 취업과 사회적 독립을 고민하는 청년세대의 문제와 겹쳐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불안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응이란, 대학을 향한 공개적인 저항보다는 성적 올리기와 스펙 쌓기, 취업률 및 대학 순위 올리기 등에 대한 동조 등 대학의 요구에 분주히 응답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사회구조적 불안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에서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있을까? 대학생들이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이들은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한국의 대학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명명하는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학교육의 어떤 측면이 이러한 실패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즉,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대학이 대부분 청년층이 겪는 불안과 위기의식을 줄이는 안전망으로서 역할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청년층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의 여러 문제 중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파악해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정리한 녹취록을 주된 연구자료로 활용했다³⁾. 대학문제에 관심이 있는 교수 혹은

3) 이 연구는 중앙대와 경희대의 사례를 주목했다. 먼저 중앙대는 기업이 직접 대학을 인수하여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단행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8년부터 두산이 경영에 참

연구자 주변의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대학생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다른 사람을 다시 소개받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의 방법으로 20명의 학생(사전면접 4명, 심층면접 16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심층면접은 2015년 9월~11월 대학 근처 카페를 비롯한 조용한 장소에서 약 1시간 30분~2시간 30분 동안 시행되었으며, 면접자들의 동의하에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문서화해 분석 자료로 삼았다. 심층면접 시 질문은 이들의 대학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각 면접대상자가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일상, 대학에 부여하는 의미, 이전까지의 혹은 앞으로의 생애 경로, 미래에 대한 기대, 삶의 가치관 등을 포함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던지되, 연구자의 질문이 대상자의 서술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대학과 관련한 폭넓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1]과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9명, 여성 7명이며, 연령대는 주로 2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로 학부 1학년 2명, 2학년 4명, 3학년 4명, 4학년 4명, 30대 초반의 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되었다. 학과별로는 경영계열이 3명,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전공 등 사회과학 계열이 9명, 인문학 계열인 철학전공 1명, 공대(기계공학) 1명이었다. 또한, 한 번이라도 학생회, 학회 등 학내 문제와 관련된 조직화한 활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9명이었으며, 이 중 4명은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소리가 학생들의 일반적인 관점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내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대학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대학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대학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보

여하기 시작한 중앙대는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대학 중 첫 방문지로 선택한 곳이다. 황우여 전 장관이 “학사운영, 교원연구, 산학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의 모범”이라고 치켜세울 만큼 중앙대는 ‘기업식 구조개혁’에 집중해왔다. 또한 2015년 2월 말 갑작스럽게 학과제를 폐지하는 극단적인 내용을 담은 학사구조 선진화계획을 발표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경희대의 경우, 대학의 기업화라는 큰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와는 다른 ‘제 3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운영방향을 내세우고 있으며, 조인원 총장은 학문 탐구 및 연구 등 ‘대학의 본질’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위기 아래 경희대는 지난 7년 간 교수 783명을 채용했고, 간판 브랜드인 ‘휴머니티스 칼리지’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인문학 위주의 교양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주목했다. 반면 심층면접 대상자 중 나머지 7명은, 학생회 등 학내활동 경험이 없고 대학문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비판의식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연구진은 서로 다른 경험과 지향을 지닌 학생들을 만나봄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한편, 심층면접 대상자의 대부분(13명)이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비용'을 해결하는 데 일부라도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일부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모두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일부는 등록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일부 생활비만을 부모에게 지원받았다.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벌어서 해결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 같은 면접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학별 학생들의 정책 수요 및 욕구를 더욱 깊이 있게 조사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한 차례 실시했다. 초점집단면접은 연구자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정보를 얻거나 문제를 제기하게 하려고 특정 개인들을 선발하여 집단으로 나눈 다음,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개인적 경험, 견해, 믿음, 태도, 느낌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플릭, 2011). 이 방법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태도, 견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한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신경림 외, 2004). 초점집단면접은 2015년 11월 6일 희망제작소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6명(심층면접 참여자 5명+신규 참여자 1명)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현재 이들이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 '대학이 학생들의 관점에서 과연 적절한 교육을 과연 제공하고 있는가, 또한 제대로 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이들의 욕구와 정책 수요를 알아보려고 했다.

[표 1-1] 심층면접자들의 특성

이름	성별	학교	학과/학년	학내활동 경험	등록금 및 생활비 해결방식	대학진학 이유
영수	남	경희대	경영학과 2	×	부모	하고 싶은 공부 세분화
유정	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4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전액장학금, 부모	당연히 가는 코스
철호	남	경희대	행정학과 1	총학생회	대출, 국가장학금, 부모(생활비)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민우	남	경희대	경영학과 3	스타트업	학자금지원(부), 주거장학, 스타트업	가야 하니까,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수진	여	경희대	철학과 4	미래리포트 학생위원	전액장학금, 알바(과의 4개)	당연히 가는 코스라는 인식, 전공지식 습득
승희	여	경희대	대학원 2	시민활동	저금, 국가장학금	자기개발, 학문
혜진	여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3	단과대 학생회장	국가장학금, 대출, 알바, 주거비(부모)	당연히 가는 것, 시위하고 싶었음
민지	여	중앙대	사회학과 4	과거 학생회 활동, 현 사회과학학회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알바(생활비), 주거비(부모)	사회적으로 이탈되지 않기 위해
상진	남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2	×	부모, 장학금(70만원)	당연함, 공부를 더 깊게 하려고
재원	남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2	×	부모	하고 싶은 공부 / 앞으로 할 일에 대한 탐색, 자연스러운 사회적 규범
지은	여	중앙대	대학원 박사수료	학내 집회 및 시위 참여경험, 학생회 참여 안함	부모 지원, 장학금, 알바, 조교, 프로젝트 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지훈	남	경희대	경영학과 1	×	부모	당연히 온 것
태준	남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4	학내 독립언론	학자금 대출, 생활비(부모 지원/단기 아르바이트)	남들 오듯이 옴
시원	남	중앙대	기계공학과 2	×	부모	당연시되는 분위기
가영	여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3	×	부모	당연히 가야하는 곳
정호	남	중앙대	법학과 4	.	.	.

*면접대상자들의 이름은 가명 처리함

더불어 연구팀은 ‘바꾸자대학포럼’이라는 명칭 아래, 한국의 대학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발언해온 전문가(학자와 교수) 8명을 섭외하여 2015년 9월 한 차례 포럼을 진행했다. 희망제작소의 정책네트워크포럼은 일반적인 정부 및 국책연구원 주최의 정책포럼과는 달리, 국가 관료 집단이나 시장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대안적 비전과 정책 지식을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특정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연구의 지적·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포럼의 논의 결과는 학생 인터뷰로 얻어진 연구내용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로 연구에 반영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또한 병행했다. 포럼위원과 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1-2] 포럼위원·자문위원

포럼위원·자문위원
고부응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
유정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서울캠퍼스 학장)
윤지관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한국대학학회 회장)
이문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 욱 (덕성여대 명예교수)
정건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포럼위원 및 자문위원명 가나다순

II. 선행연구 검토:

신자유주의 대학과 대학생

1. 대학의 팽창과 고등교육의 시장화
2. 청년층의 구조적 불안과 대학

II. 선행연구 검토: 신자유주의 대학과 대학생

1. 대학의 팽창과 고등교육의 시장화

1) 신자유주의와 대학

탈냉전 이후 세계화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정치·경제적 가치체계의 틀로서 신자유주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부각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영향력의 핵심은 세계화 자체라기보다 신자유주의 통치성(neoliberal governmentality)으로 강요된 정책들이다. 올슨(2015)은 최근 실행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교육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치철학과 관련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올슨, 2015:21). 한국 교육계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기조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뒤 첨예하게 분출하기 시작했고,⁴⁾ 한국 대학 시스템은 국내외 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개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와 대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80년대 이후 세계의 고등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국가는 대학 부문에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을 시장 변동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화 메커니즘을 사용했다. 그 방식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 강화, 경쟁적 재정 지원, 계약제 고용 확대, 외주화, 대학의 기업 설립 등 매우 다양하다. 국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을 시장에 전면적으로 노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을 단행하면서 대학들이 시장압력에 전면 노출되는 변화를 겪어왔다. 정진희(2012)는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뒷받침한 주요 이데올로기로 ‘지식경제론’과 ‘신관리주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식경제론은 탈산업사회론과 시장이데올로기가 결합한 것으로, 각국의 대학

4) 당시 정부가 펼친 대학 개혁 논리에는 ‘시장’, ‘경쟁’,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 등의 개념을 활용한 데서 알 수 있듯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좋은 정책을 도입하는 것뿐이지 신자유주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미국과 영국의 정책 속에 이미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많이 스며 있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주경복, 2007).

정책에 적용될 때 대학을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기지’로 강조하며 대학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킨다(정진희, 2012). 또한, 신관리주의는 서구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공공 부문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유도한 이데올로기를 일컫는데, 대학 부문에도 기업식 경영이 도입되면서 대학의 운영방식과 내부구조, 고용안정성과 교원의 노동조건 등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 곳곳에서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은 줄이고 대학 경영진의 권한은 강화하는 조치가 도입됐다. 이러한 과정은 시장이 이데올로기와 달리 대학에 대한 국가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 내에서는 경영자의 권력 강화와 교원의 고용 불안정, 노동조건 악화를 함께 불러왔다.

노동 배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결과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정부는 사회적 혼란의 주범으로 교육의 위기를 지목한다. 부실한 교육시스템이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약화하고, 청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배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예산을 줄이고, 관료화되고 비효율적인 공교육 체계를 혁신한다며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는 ‘교육 민영화’ 정책이 시행된다. 이것이 지난 30여 년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한 대부분 국가에서 벌어진 교육 개혁의 공통된 전개 양상이다. 고등교육의 시장화는 1990년대 이후 시장이데올로기가 확산하면서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성장했는데, 그 수준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장화 확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2) 5.31 교육개혁안과 한국 대학교육의 대중화

한국 대학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엘리트기관에서 대중 시스템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⁵⁾

5) 대학교육 대중화의 정점을 찍은 것은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린 전두환 정권의 ‘7.30 학원 자유화 조치’와 대학설립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이다(박원익, 2014).

1990년대 중반의 신자유주의정책 도입 이전에도 한국의 대학시스템에는 시장 원리가 상당 부분 적용됐다. 군부독재 정권이 자본주의 산업 발전을 위해 재원을 국가로 집중하면서, 자본 축적에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며 사립대학 위주의 시스템이 확립되고 교육상품화를 진전시켰기 때문이다. 1995년 문민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은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포괄하는 교육정책 패키지로서 자율과 다양성, 세계화를 목표로 한 23개 분야 120여 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정치적 경쟁이 강화된 상황에 대한 한국 지배엘리트의 대응이었다.

이 교육개혁안은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일련의 시장정책들뿐 아니라 교육 재정 확충 요구가 핵심요구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재정 확충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주로 규제 완화와 같은 핵심 시장정책이 시행돼 신규 대학이 대거 늘어나고 대학 정원이 확대됐다. 1996년 5.31 교육개혁안의 핵심적인 제도인 '대학설립준칙주의'⁶⁾에 따라 대학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오늘날 부실경영의 온상이 된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 설립되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고등교육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기업이 대학을 이윤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었다.

1997년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빠지면서 대학 부문에 시장정책이 더욱 확대됐다. 국가는 경제위기를 맞아 대학시스템을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논리로 사회가 재편된 이후 일자리 자체가 축소되고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신분상승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로써 개인들의 삶의 불안정성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과 경쟁에서의 패배로 돌려버리는 전략이 가능해졌다(박중현, 2015). 현행 고등교육법은 명목상으로는 국가의 교육 책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천명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만 본다면 대학의 운영도 전적으로

6)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네 가지 최소 설립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로 1996년 도입됐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자 1996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모두 63개의 대학이 신설되었다(뉴시스, 2013).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학 정관에 의해,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시 및 감독을 대학에 '위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 내부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독점적인 소유권을 용인하는 대신, 국가가 교육의 목적을 결정하는 식으로 국가와 대학 간의 타협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3) 고등교육의 시장화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두산을 대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 논리가 어디 가나 통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월간조선』, 2008.11)

오늘의 한국 대학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맞는 질적인 개선이 뒤따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제는 고등교육의 내실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에 관한 기존 연구 중 시장이데올로기와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시장정책이 대학에 끼친 변화를 조망하는 연구는 흔치 않다. 김누리(2009, 2010)와 고부웅(2010)은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 대학의 운영방식 변화에 주목하는데, 그들은 '기업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학의 변화를 바라본다. 김누리와 고부웅은 한국의 대학이 갈수록 기업에 예측되면서 학문 공동체로서 대학이 겪는 위기를 미국의 경험과 비교하며 다루는데, 이 연구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한국 대학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과 그런 현실이 대학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잘 포착했다.

2008년 5월, 두산이 1,200억 원을 출연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의 변화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중앙대 이사장에 취임했고, 이사회는 '두산맨' 위주로 채워졌다. 중앙대의 구 재단은 투자가 부족해 '천원재단'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장기간 학교가 재정난에 시달렸던 상태였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중앙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법인임명제를 시행했으며, 교수와 직원들의 단일

호봉제를 성과급형 연봉제로 바꾸었다. 회계 과목이 ‘필수교양’ 과목으로 커리큘럼에 자리 잡게 되었고, 2010년에는 경쟁력을 이유로 18개 단과대를 10개로 줄이고 77개 학과를 46개로 통폐합했다. 박용성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 중 학생을 “원자재”에 빗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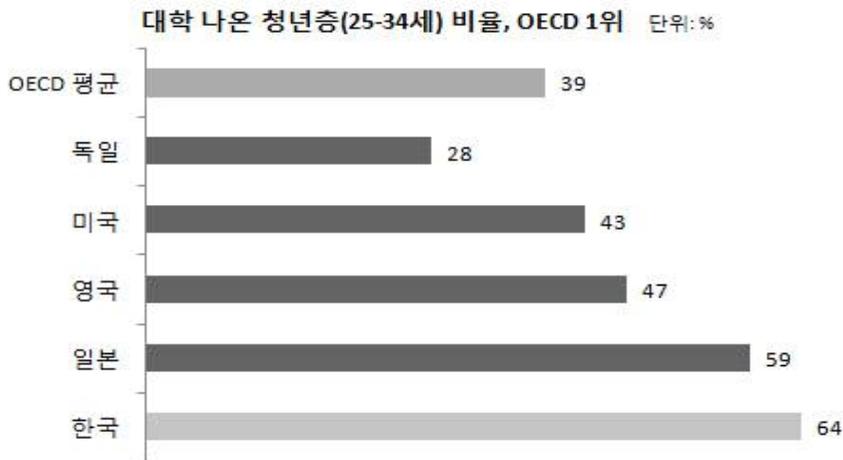
이와 같은 대학의 기업화는 학문과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사라지게 한다. 취업이 잘 되는 전공에 대한 쏠림현상을 만들어내고, 기초학문을 존속시키는 안전장치를 없앴다. 박원익(2014)은 현재 학령인구 증가를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량적인 ‘대학평가’와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조정이 국가와 대학의 전형적인 공모 사례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의 강고한 학벌 구조와 대학 서열화는 위계화된 노동시장과 재벌주도의 성장구조가 반영된 것이며, 개별 대학이 외치는 ‘경쟁력 강화’와 ‘혁신’은 이러한 독점적이고 파행적인 대학 구조를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경쟁촉진정책을 통해 교육이나 연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의 목적을 ‘취업’이나 개인적 출세로 축소하고 대학을 국내외 기업들을 위한 시장창출의 장이자 국가 경제의 하부구조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시장정책이 촉진하는 경쟁지향적 문화는 학생 간, 학생과 교원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소외를 강화하고 지적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효율을 앞세운 ‘발전’과 자율을 중시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대학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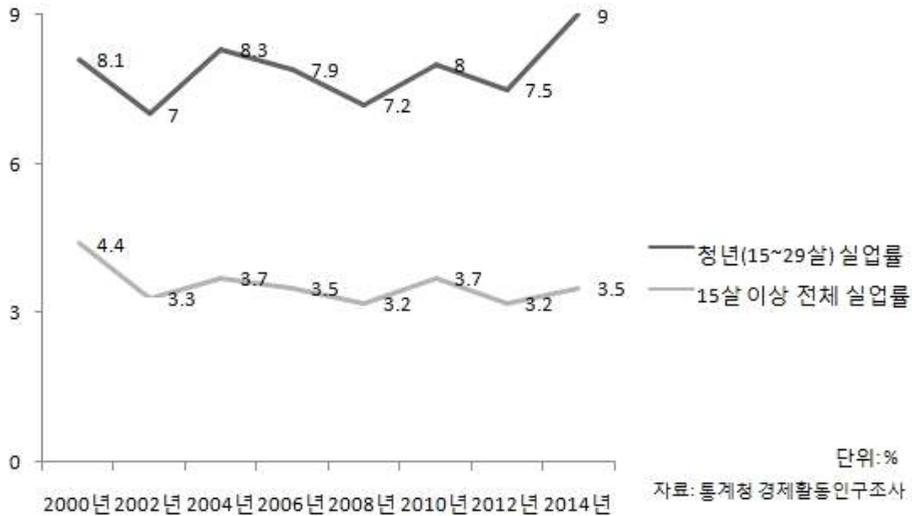
2. 청년층의 구조적 불안과 대학

이처럼 1990년대 이래로 한국 대학이 양적 팽창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거치는 동안, 대학을 다니는 청년층의 삶의 조건도 급격하게 변화했다.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노동시장 유연화와 청년실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세대의 삶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최근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

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비용을 해결하고 사회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졸업 후를 미루고 대학에 머무는 기간이 증가했으며, 규범화된 생애과정, 즉 대학교육 이후 (정규직) 취업, 결혼 및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이행 역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림 1-1] 대학 나온 청년층의 취업률 (출처: 교육부, 2013)



[그림 1-2] 2014년 청년실업률 (출처: 한겨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보듯 한국은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나, 대졸자의 취업률(75%)은 가장 낮으며, 청년층 실업률 역시 인구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3%로 경제위기 시기보다는 완화되었으나 경제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은 물론, 안정화 추세에 들어선 전체 실업률(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이성균, 2009:573). 구직포기 청년층(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이나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청년세대의 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는 계산도 존재한다(조성주, 2009:91).

이처럼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경험되기 시작해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졸업생들과 청년백수층의 형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어떤 세대보다 취업준비에 열심이었던 이들은 굳게 닫혀버린 취업문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이며, “조만간 ‘멀쩡한 청년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판”(『한국일보』, 2000.12.26)이라는 우려

가 사회적으로 확산했다. 실업, 고용조건, 노동시장의 변화는 청년층 불안의 구조적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07년 출간되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88만원 세대』에서는 “지금의 20대 중 상위 5% 정도만이 5급 공무원 이상의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평균 임금 88만 원 정도를 받는 비정규직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청년의 미래를 진단하기도 했다(우석훈, 2007).

이러한 청년 세대의 상황에 대한 암울한 진단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 명칭인 ‘삼포세대’의 등장으로 더욱 강화된다. 2011년 『경향신문』의 한 기획기사에서 사용한 이 용어는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경향신문』, 2011.5.11)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청년층을 일컫는다. 이후 이 용어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급속히 퍼져 ‘88만 원 세대’ 이후 가장 대표적으로 청년층을 표상하는 용어가 되었고, 청년층이 포기해야 하는 요소들의 목록이 확대되면서 ‘사포세대’, ‘오포세대’, 현재 자주 사용되는 ‘N포세대’ 등으로 변주되기도 했다. 노동과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며 가족 구성을 포기하는 청년상이 전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표상이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 대다수의 지배적인 정서와 분위기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주거,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스펙을 쌓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는 점이다. 취업 준비는 대학교육을 받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학은 취업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슴에 성적표 · 자격증 · 인턴 경력표 · 봉사활동 카드 · 헌혈 증서를 치렁치렁 달고도 대학이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시사인』, 2009.1.12)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오찬호(2015a)는 신자유주의적 문화 규범의 확산 속에서 대학문화 역시 경쟁의 원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 ‘취업 9종 세트’가 등장한 맥락을 조명한다. 그는 기존의 3종(학벌, 학점, 영어점

수)에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인턴, 봉사활동, 성형수술이 추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기업 취업 ‘준비’의 자격요건이지 합격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이런 사회에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대학생들은 열심히 자기계발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치열함’과 불안만 심해질 뿐이다. 오찬호는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 버티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 인턴으로 버티고, 수습사원으로 버티고, 비정규직으로 버텨야 하는 사회에서, 대학생들에게 변화를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길 희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연구한 김영 · 황정미(2013)는 다양한 상황에 부닥쳐있는 청년들의 진로 설정과 생애계획의 수립, 새로운 일대기(biography)의 형성 여부와 특징을 고찰했다(2013:218). 그 결과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라는 두 가지 현상이 발견되었다. 요요 이행이란 이들이 이행기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횡적으로 다양화되기보다는 단선화된 경로 안에서 앞뒤로만 오가는 궤적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DIY 일대기는 청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자원과 사회적, 제도적 모순에 직면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의미하는 용어이다(2013:254). 즉, 이 연구는 청년들의 삶이 개인화된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그것도 획일적인 경로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경향이 현재의 대학문화를 규정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수남 외(2012)의 연구는 ‘88만원세대’ 논의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는 이른바 ‘청춘론’들이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빈곤계층 청년에 주목하면서,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학생, 청년을 위한 각종 담론이 범람하지만, 사실상 이는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 빈곤계층의 청년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위로, 열정, 도전, 비판, 희망, 공감 등의 키워드를 내세워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들은 넘쳐나지만, 이들이 소통을 시도하는 대상은 제한된 범주의 대학생에 불과하다. 사회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성장이 유예되고 자아정체성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

의 배면에는 애초부터 이러한 ‘청춘의 유예’조차 불가능한, 이른 나이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해야만 하는 빈곤계층 청년이 존재한다. 결국, 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청년이 대학에서 유예된 시간을 겪고 있거나, 혹은 이러한 기간마저 갖지 못한 채 저임금의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가 대학문제에 주목하면서도 청년층 불안의 구조적 조건을 살펴본 것은, 이러한 조건이 대학의 사회적 의미, 개별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를 변화시키는 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나아가 한국 청년층이 겪는 사회구조적 불안이라는 현실 속에서 과연 ‘대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연구의 진단처럼 대학은 그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전락한 것일까.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대다수 대학생은 그저 취업 일변도의 정책에 순응하고 따라가고만 있는 것일까. 이들은 대학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대학생이 겪는 불안의 경험이 신자유주의적 대학문제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현재 대학 변화의 흐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들이 원하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인지, 과연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하는지를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한국 대학의 현실:

청년의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

1. 대학 내 교육권 실태
2. 학생복지와 사회권
3. 대학 내 민주주의
4. 청년의 불안을 재생산하는 대학

Ⅲ. 한국 대학의 현실: 청년의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

1. 대학 내 교육권 실태

이후의 논의에서 드러나겠지만, 대학생이라는 광범위하며 느슨한 범주의 집단은 매우 이질적인 삶의 경로와 가치관을 지닌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진행한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교육은 민지(여, 4학년)의 언급처럼 “사실상 관계의 측면이나 배우는 내용의 측면이나 고등학교의 연장선상” 이거나 “기대에 비해 알팍했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막연히 갖고 있었던 대학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거나 실망으로 바뀐 경험이 있었다. 가령 민지는 “사회적으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 당연하게” 대학에 진학하긴 했지만 “잔디밭에서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진짜 학술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은 “막상 와서 보니 고등학교보다 더 알팍하고, 그냥 시시콜콜한 티브이 프로그램들 얘기나 하는 곳”이었으며 “수업에서도 고등학교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배울 줄 알았는데, 달달달 외우는 게 똑같았다”는 것이다. “PPT(발표용 파일) 달달 외워서 객관식 시험 준비하고, 계속 달달달 외우는” 자신을 보며, 대학에 대해 지녔던 막연한 기대가 “1학년 때 사실상 다 깨져버렸다”고 표현했다. 재원(남, 2학년)과 상진(남, 3학년)의 발언에서도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가 깨졌던 경험이 도드라졌다. 이들은 자신이 받는 대학교육의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수업 폭이 너무 좁아요. 교수님도 별로 없고. EBS에 나오는 미국 대학 강의 같은 거 보면, 그거랑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랑 비교했을 때 갭(차이)이 너무 심하잖아요. 미국 대학 강의는 그걸 보면서 나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걸 보면, 한 마디 한 마디 던지는 질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걸 받아 적고 있잖아요. **교수님의 생각을 받아 적고 있잖아요.** (재원, 이하 강조는 연구자)

한 학기 동안 배웠던 필기량 교과서를 다 해서 정리했는데도 A4용지 4장 밖에 안 나오고…. (상진)

이들은 대부분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하는 공부가 ‘자유’, ‘진지한 학문’, ‘자율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기대는 고등학교 때 억압적으로 경험했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고등학교 때의 공부와는 달리 좀 더 자유로운 학문적 논의가 오가고, 보다 심화된 전문지식을 탐구하며, 배움의 주체인 대학생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경험한 대학수업과 교육은 인용문의 표현처럼 “한 마디 한 마디 던지는 질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의 생각을 받아 적고” 마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상진(남, 2학년)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치 과목보다 더 얕은 수준의 지식을 가르치는 전공수업도 있었다며, 한 학기 동안의 배움을 “A4용지 4장”이라고 표현했다. 혜진(여, 3학년) 역시 “대학수업 같지가 않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한 반에 40명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서는 전공수업을 90명, 100명 넘게 들으니까 힘들다”며 대학 1, 2학년 때 느꼈던 실망감을 토로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이 받는 수업의 질과 대학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수진(여, 4학년)은 자신이 들었던 글쓰기 수업의 담당 교수가 교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고되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이 처음 들었을 때는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굉장히 알차게 진행”되었던 해당 수업이, 두 개의 수업을 하나로 통합해 교원을 줄이고 수강생을 늘리면서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대학교원의 정년보장을 폐지하고 기간제와 같은 불안정한 비정규직 강사 자리를 양산하고 있다(이상룡, 2015). 유은혜 의원(제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원 중 전임교원은 28.4%에 불과하고 비전임 교원이 61.6%에 달했다. 특히, 비전임 교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강사는 4~6개월 초단기 계약직인 데다 쉽게 해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균 연봉이 650만 원으로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강의의 질을 보장하기 힘든 조건에 처해있다.⁷⁾ 대학은 교양교육 강화 요구에 대응하는 저비용 임시방편으로 이들을 활용하고 있다. 학부의 교양과목 대다수를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교수평가 기준으로 ‘좋은 강의’보다는 논문과 연구 실적이 중시되는 현재 상황 역시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수가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팀플(팀플레이(team play)의 줄임말)발표만 맡겨놓고**, 자기는 논문 쓰기에 바쁘고... (유정)

교수님들도 강의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시간강사가 더 잘한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연구에만 집중하시니까라고 해요.** (교수님들은 수업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와요. (시원)

그냥 취업 식으로 교육하는 교수님들도 처음에는 안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을 텐데, 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좋은) 교육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게 비단 그 쪽(교수)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상진)

삼성경제연구소의 『대학 혁신: 7대 유형별 전략』에 따르면, 철저한 성과 중심의 교수평가제도는 연구실적 우수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수의 연구 비중을 높이는 한편, 강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책임 강의 시간수를 다양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2006:142). 이처럼 교원성과급을 도입함으로써 대학의 교수는 학자라기보다는 인위적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인적자본을 개발해야 하는 주체로 간주된다(이상룡, 2015).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교육에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비를 많이 따오는 사람, 그리고 연구 결과를 수익성 높은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사람이 오늘날

7) 도너휴(2013)에 따르면, 정년보장은 교수들이 지적인 노동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일률적인 표준화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서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고, 교수는 교육자나 학자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도너휴는 교수가 이미 완성된 교육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관리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존경받는 교수가 되면서, 대학의 교육적 · 학문적 기능은 크게 약화했다(위시번, 2013; 정진희, 2012).

학생들이 지적한 것처럼 대형강의가 점점 증가하고, 수업의 다양성과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은 대학 생활에서 수업의 의미를 축소하고, 대학생들이 수업은 그저 졸업 학점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게끔 하고 있다. 민지(여, 4학년)에게 수업은 “영혼 없이 몸만 가는” 일이었다.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 학기 300만 원 정도의 큰돈을 들여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수업을 통해 얻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일부 학생은 학내에서 다른 활동을 통해서 대학을 다니는 의미를 찾고 있다고 했다. 민지는 “대학을 다니면서 얻었던 것은 시간”이라며, 수업 외의 남는 시간에 동기들과 교류하고 학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했다. 민지는 수업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활동들이 자신을 “채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진(여, 4학년)의 사례처럼 수업에 더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대다수 학생이 대학에서 하는 것은 ‘취업 준비’이다.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어딘가에 쫓기고 치이는 모습이고... 한 달 간격으로 자격증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전공 공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격증이나 토익 같은 어학시험을 봐야 하는데, 전공 공부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업시간에 (토익이나 자격증 관련) 책을 늘어놓고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 하듯이...** (수진)

수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취업으로 시작해서 취업으로 끝나는” 학교 분위기에서, 이들이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하는 일은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 하듯” 토익이나 자격증 관련 교재를 보는 일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대학에서의 배움을 원하면서도, 취업 중시의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꿀강의”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강의로 여겨지고 있다. 꿀강의는 휴강이 잦고 출석체크가 느슨한 강의를 의미한다. 즉, 취업을 위해 높은 학점이 필수요소가 되면서 새로운 것에 관한 탐구는 구조적으로 봉쇄되고, 학생들이 배울 것이 많은 강의보다는 학점 취득에 유리한 꿀강의를 더 선호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오찬호, 2015:76).

보통 수강신청 할 때 보면 애들 마인드가 이거예요. 이 수업이 뭘 가르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신청하기보다는 **아, 교수님이 프리하다더라, 학점을 잘 준다더라, 과제가 별로 없다더라, 아니면 시험이 쉽다더라,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강의계획서보다는 강의평가서를 먼저 보게 되고,** 먼저 (자신이 판단해서) 신청하기보다는 그 강의를 들었던 선배들한테 어떤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영수)

보통 '이삭줍기'라고 하더라고요.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정원이 차지 않은) 강좌 좁는 걸요. 다 버리는 이유가 있어서 함부로 주우면 안 되는데. **인기 있는 강의들은 이유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좋거나, 말 그대로 과제가 없는 '꿀강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지훈)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고등학교 때 이들이 경험했던 입시교육만큼 치열하고 경쟁적인 곳이 되었다. 이들에게 대학은 수업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조차 경쟁을 해야 하는 공간이다. 영수(남, 2학년)에 따르면, 수강신청은 “정보력 싸움과 인맥 싸움”이다. 수강신청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아이디까지 빌려서 보통 한 사람당 아이디 세 개를 돌려야만 겨우 수강신청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년별로 다른 날짜에 수강신청을 하다 보니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자기가 3학년이면 1학년, 2학년 (학생의) 아이디를 빌려놓고”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기 과목을 먼저 클릭했다 실패해버리면 나머지 과목까지 수강을 못 하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과목을 먼저 수강신청 하느냐의 문제로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수강신청에 실패한 사람 중에서 휴학한 사람이 많다는 가영(여, 3학년)의 말은 수강신청조차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며 ‘실패자’ 또는 ‘낙오자’를 만들어내는 현실을 보여준다.

치열한 수강신청 경쟁을 뚫고 수강에 성공한 이후에는 학점을 위해 경쟁한다. 대부분의 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상대평가제도는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고할 힘을 주기보다는, 내 옆자리에 앉은 이들과의 경쟁에만 몰두하

게 한다. 중앙대의 경우 수강 정원의 5%에게는 반드시 D학점을 부과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중앙대에 다니고 있는 가영은 상대평가제도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에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수업은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대학에 상대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단순히 상대보다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C학점을 맞아야만 자신의 학점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일상적인 경쟁을 몸으로 체화하고 있다. 대학평가에 사활을 건 대학 당국이 학점 '인플레이'를 통제하기 위해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참여한 수업에서도 일부 학생에게는 의무적으로 C와 D학점을 주어야 하는 상황도 더러 발생한다. 상대평가와 함께 격화된 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해야 하는 과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을 받으며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과제를 해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점점 교육의 다양성 역시 잃어가고 있다. 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혜진(여, 3학년)은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의견이 반영된 수업 프로그램 구성을 계획 중이다. 혜진은 “듣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교양과목도 너무 없고, 대학이 정형화된 교육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하는 수업은 학생회를 통해 공표한 교육 정책 공약이라고 했다. 특히 ‘회계학’ 과목이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중앙대에서는 대부분의 교양 수업이 경영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다양한 교양과목과 인문사회 전공수업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다수의 학생이 대학의 여러 문제 중 강의와 같은 교육적 측면에 대해 가장 큰 불만족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로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행동을 안 하고, 통로도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가 교육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태준)

학생들이 대학수업에 그렇게까지 의미부여를 하거나, 내가 이걸 어떻게든 바꿔줘야겠다 하는 애착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혼자 세 시간 수업 듣고 오지 그런 식이고. (영수)

등록금을 낸 소비자로서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불만은,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주장으로는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 태준(남, 4학년)은 “2004년에만 하더라도 총학생회에서 듣고 싶은 강의를 앙케트 조사해서 학교에 제안했고, 실제로 학생들이 제안한 강의가 열렸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는 부러움과 함께 현실에 대한 무력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렇게 개설되었던 교양강의가 중앙대 재단에 두산이 들어온 이후 폐강되었다는 사실은 대학의 기업화 이후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학생복지와 사회권

한편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지출하게 되는 ‘삶의 비용’을 해결하고 있었다. 유기홍 의원(제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낸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 중에는 등록금이 3,092만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주거비는 2,690만 원, 생활비는 2,4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생들 52.6%가 자취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주거비용은 한 달 평균 66만 원으로 학생이 부담하기에는 과중한 수준이다.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 자취 여부, 거주 지역 등에 따라서 삶의 비용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다. 부모가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학생이 있었고, 등록금은 부모의

지원과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생활비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학생도 있었다. 등록금 전부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고 생활비까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버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으로 등록금이 과중하다고 지적했으며, 부모에게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대부분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궁핍과 삶의 고달픔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처럼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대학을 다니는 상황에서, 대학이 제공하는 학생복지와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먼저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학생복지 및 지원제도에 관해 질문했을 때, 학교 건물이나 시설 등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상담실이나 텀플실과 같이 대학에서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몇몇 시설을 언급하면서 “뭔가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걸 반영해서 하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놨으니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학생복지 운영이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중 일부는 태준(남, 4학년)처럼, 학생복지 제공을 “대학생을 피교육자로서 보호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당연한 것”으로 개념화하는 예도 있었다. 민지(여, 4학년)는 소득수준 1분위에 속해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충당하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다. 방값은 부모님이 내주시는 대신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서 쓰고 있다. 민지는 “대학은 학교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어서 대학을 다니면서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권리와 혜택은 전혀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내 학생복지 제도에 대해서 민지는 시험 기간에 “간식 주는 복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대학 측이 폭넓은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지금 총학생회에서 주거실태 조사하고, 다른 학교는 민달팽이 기숙사니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저희 동네, 흑석, 상도가 집은 안 좋은데 비싸거든요. 저는 거울에 죽을 것 같아요. 운수가 안 나와요. 아무튼, **이런 주거문제라든가...** **알바**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학교 주변의 알바정보라든가..., 사실 주거 같은 것도 특징, 가격 등이 공유될 수 있으면 개선하고 값도 합리화할 텐데, 알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교 근처 어디가 진짜 '꿀알바'인 지... 기본생활에 관해서는 진짜 힘들거든요. 알바하고 그러면서 팀플하고, 팀플할 공간 또한 없어서 카페를 전전하는데 학교 공간도 안 빌려주고. 자기 것인 줄 알고 학교가 막... 기본생활도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돼도... (민지)

민지는 학생복지가 단순히 학생회에서 시험 기간에 선착순으로 나누어주는 야식이나 간식(그것도 줄 서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대학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은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복지는 대학운영에서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적 인식이었다. 대학 진학으로 발생하는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 그로 인해 각종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이들에게, 대학은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를 학생 개개인이 능력껏 해결할 수밖에 없게끔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숙사나 각종 제도를 통해 직접 주거 및 생활지원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적절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끔 지원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기숙사의 경우, 학생 수용률이 턱없이 낮고 입사 자격기준이 몹시 까다롭다는 것이 중앙대와 경희대 모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얘기는 많았어요. 기숙사를 성적대로 자르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그게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기숙사가 특히 높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4점대가 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기숙사가) 성적 높은 학생들을 위해서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진)

상진의 지적처럼, 기숙사가 성적순으로 배분되고 한 달 기숙사비가 약 45만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작 주거지원이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 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힘들다. 장학금 역시 수혜의 폭과 기준이 적절하

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장학금 문제가 제일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 공무원이거나 그러면 아예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수석을 해도 장학금이 (등록금의) 한 3분의 2밖에 나오지 않고. 경제적으로 대학이 어렵다 보니까... (수진)

저희 학교 전액장학금은 4.3만점에 4.3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만큼 어렵죠. 근로장학금은 행정실에서 일하고 이런 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학교는 행정실이 **용역, 인력사무소 같아서** 경영대 사람이 없으면 행정실 (근로)학생들 데리고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입학) 시즌은 굉장히 싫어요. 행정실 알바가 다 하는 거지. 시급으로 따지면 정말 (근로장학금이) 안 높은 거죠. (영수)

경희대는 전체 금액 기준으로는 사립대학 중 장학금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과 수석을 해도 장학금이 3분의 2밖에 나오지 않고”, 만점의 학점을 받아야 겨우 전액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조건에서 많은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아 장학금을 받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이 ‘근로장학’이라는 명분하에 투입되는 도서관, 행정실 근무도 사실상 학교가 필요한 인력을 저비용으로 충원하고 장학금이라고 생색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용역, 인력사무소” 같은 행정실에서 ‘행정실 알바’가 되어 수업시간 외 모든 시간을 노동에 할애하면서 한 학기 150만 원가량의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훈(남, 1학년)은 학교에 ‘이색장학금’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토익장학금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교내 대회나 공모전에서 상을 타면 장학금을 추가로 주는 게 있어요.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대외활동을 격려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장학금조차 취업 활동의 성과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복지 수혜의 기회조차 단과대별, 학과별로 차등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복지시설은 정경대와 경영대의 퀄리티가 달라요. (정경대는) 경영대보다 더 많은 재학생이 있는 곳인데, 건물 자체 퀄리티도 너무 차이 나고, 강의실 수도 경영대가 더 많고. (경영대는) 새 건물에 기자재 퀄리티도 너무 다르고. 취업률이 달라요. 정경대는 30% 이런 데, 경영대는 50%니까. (유정)

저희 과(정치국제학과)가 장학금이 더 짜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짜요. **경영은 되게 많이 주는데 저희 과는 퍼센티지가 달라요.** 학년 당 4~5명 정도. 퍼센티지를 늘려주고 수혜자를 늘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장학금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더 공부하게 하는 원동력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교가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재원)

장학금 자체가 적고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만큼이나 단과대별, 학과별로 수혜의 기회가 차등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일괄적으로 교내에서 가장 많은 장학금과 가장 좋은 교육환경의 혜택이 주어지는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답했다. 경영학과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학생복지 영역에서조차 경영학과를 가장 중시하는 분위기가 대학 내에서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유정(여, 4학년)이 "취업률이 달라요. 정경대는 30% 이런데, 경영학과는 50%니까"라고 말했듯, '취업률'은 학과별 지원금과 학생장학금을 배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취업률을 기준으로 학과체제와 학사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현재 대학 구조조정의 흐름에서 경영학과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경영학과는 1999년 424개에서 지속해서 증가해 2014년 기준 686개에 이르고 있다. 1999년 일반 4년제 대학생 중 경영학 전공자의 비율은 7.1%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전체 213만 46명 중 9.6%(20만4,183명)에 달할 정도로 경영학은 대학에서 지속해서 팽창해왔다(오찬호, 2015:83에서 재인용). 문제는 경영학과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취업률을 기준으로 경영학이 아닌 다른 전공의 학생들에게는 대학 내의 다양한 자원과 혜택이 차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학생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학생들이 대학 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지는 작년에 학교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학생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학 내의 사회적 관계를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재하다고 설명한다.

저희 학교에 작년에 외로워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작년에 법학관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국문과의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 그건 그래도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집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2학년 때는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동기들도 잘 못 만나게 되고. **고학년이 될수록 인간관계가 협소해지더라고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안 만나게 되고.** 예전에는 팀플을 하면 사람들이랑 친하게 되고 이랬는데, 팀플도 헤어지면서 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딱딱 할 일만 하고, 헤어지는 법을 알게 되니까.** (민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 내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협소해지고 “헤어지는 법”을 알게 되는 상황에서 학생사회의 공동체 인식은 점점 사라지고, 개별 주체만이 고립된 상태로 남는다. 많은 등록금을 치르고, 가족의 지원에 생활을 의존하거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은, 싼값으로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힘들고 장학금도 ‘쥐꼬리만큼’ 주어지며, 더군다나 학내에 이들의 고립을 방지할만한 그 어떠한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학생복지’가 학생 구성원 모두가 대학 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일정한 생활수준과 관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 제도적 체계를 의미한다면, 학생들의 발언을 통해 현재 대학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적인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학생 복지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학 내 민주주의

대학은 학생들이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사소통, 민주주의적 절차를 배우고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인

식하고 경험하고 있을까. 현재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은, 선출되지 않은 소수집단이 대학구성원 대다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재단의 대학 복귀를 돕고, 대자본과 친기업 엘리트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는다. 교육부 장관 등 선출되지 않은 신자유주의 국가 관료들은 대학총장직선제 폐지를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조치로 강행했다. 이런 조치는 많은 대학, 특히 비수도권지역 국립대학에서 교수회 등의 자치조직과 상당한 마찰을 빚었다. 다른 대학에서도 독선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업식 대학 운영이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중앙대는 두산이 대학을 인수한 이후 기업식 학과통합 과정에 비민주적 절차의 많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학생들은 대학 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학생 자신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대학 측에 전달되고 반영된다고 느끼고 있을까. 급격한 기업식 구조조정을 경험한 학교의 몇몇 학생들은 학내 민주주의와 관련해 학교 측의 '노조탄압식' 학생통제와 이로 인한 자발적인 학생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통제가 심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있고 나서, 대학이 정치에 대해 몸서리를 치는 건 확실히 있어요. 정치적인 것에 대해 몸서리치는. 예를 들면, 다른 학교는 정치적 내용으로 대자보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말 안 하던데, 저희 학교는 대자보 떼고, 강의실 빌려주는 것도 흑시나 (정치와) 관련될까 봐 검열이 심해요. 학지처(학생지원처)라든가 이런 데서 정치조직을 말살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민지)

굳이 학교에서까지 이렇게 막아야 하나, 왜 왜 이러는 걸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한테 뭐가 좋아서 이러는 걸까,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중앙대 '평화나비네트워크'에서 위안부 관련 촛불문화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위험하다고 (허가를) 안 해주다가, 전기촛불을 쓰면 해준다고 하다가. 그래서 전기촛불 나눠주잖아요... (혜진)

학생회 활동 경험이 있는 민지(여, 4학년)와 혜진(여, 3학년)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존재다. 대자보 내용조차 검열을 받아야 하고, 정치적 내용이 담겨있으면 대자보를 바로 떼어가는 상황에서 학생의 의견이 공론화될 가능성,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는 지극히 제한된다. 학내 집회나 비판적인 학회활동을 위해 대학 내 공간을 잠시 빌리는 것조차 어렵다. ‘정치적’인 것에 몸서리치고 선을 긋는 대학문화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것을 어렵게 하고, 대학생이 아닌 대학 본부를 대학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만들고 있다. 혜진은 실제로 학교 측의 이와 같은 대응이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해 무관심하고 나아가 정치혐오 성향을 갖도록 이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롭게 학생들의 의견이 오가야 할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조차 학교 측에서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인식 때문에, 대학 내 특정 이슈를 공론화하고 여론화하는 장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은 소비자로서 받는 서비스를 민주주의와 혼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 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시원(남, 2학년)에게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서명운동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민주주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더 윗분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학생들 얘기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재개발원** 이런 데는 **(학생 의견을) 잘 받아주거든요.** 저희가 이번 달 초에 다른 학교는 취업 리크루팅이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고 **글 올렸더니, 다 댓글 달아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원)

이 학생의 경우 윗분들이 “학생들 얘기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을 민주주의의 문제로 인식하는 동시에, 인재개발원이라는 학생취업지원 부서의 신속한 민원 대응을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마치 고객센터 게시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해당 기업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듯, 현재 대학의 민주주의 평가는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로 대체되고 있다. 나아가 지훈(남, 1학년)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솔직히 연구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기존의 역할도 있지만, 대학도 결국은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니즈에 맞는 걸 제공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내 민주주의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사회 자체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사실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말이 안 통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페이스북에 ‘대나무숲’이라고 있잖아요, 익명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글은 많이 올라와요. 소비자로서 이게 싫다, 이런 단발적인 짜증에 불과한. 아 왜 이러나, 정말 싫다 정도지, 이게 싫으니깐 이걸 총학생회에 전화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 걸 학습 받아본 적도 없고. (태준)

대학문화와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동아리 대표나 학회장의 나이가 어려워지고, 단과대 회장의 나이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에서부터 느껴요. 다들 동아리 이런 거는 빨리빨리 손 떼야 취직하지 그러죠. 원래 3학년 때 회장을 했는데, 2학년이 회장을 하더니, **지금은 1학년들이 회장이 되고, 다들 빨리 취업해야지, 그런 건 손 떼야지 등의 생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보면서, 아 공동체가 다 죽어가는구나 느껴요.** (유정)

정치적 성향이나 태도와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은, 학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학생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학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에 관해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NS를 통해 익명에 기대어 단발적인 짜증을 발설하지만, 나서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법을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한 경험 역시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된 건강한 민주주의적 문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유정(여, 4학년)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 학생자치 문화가 무너지고,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 조직조차 취업 경쟁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화해서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의 대학에는 부재한 것이다. 지은(여, 대학원생)은 2015년 중앙대에서 학사구조선진화 방안(학과폐지제)이 추진되어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가 결국 미수에 그친 사태를 “정지 버튼이 아니라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민주적인 대학구조조정 방안의 실행이 중단된 것이 대학

내부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가 불거지는 등의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학내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와 건강한 조직적 기반이 부재한 현실에서 학내 민주주의는 대학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퇴화해 버릴 수밖에 없다.

4. 청년의 불안을 재생산하는 대학

앞서 살펴봤듯, 청년층이 경험하는 사회 구조적인 불안은 대학 내 학생들의 일상을 ‘딱딱하게’ 변화시켰다. “15학번 새내기가 중간에 휴학하고 공무원 준비한다고 노랑진으로 가버렸다”며 자신이 받았던 충격을 얘기하던 혜진(여, 3학년)은 대학생들이 겪는 불안과 “점점 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엔포세대’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점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까지 삼포세대만 알고 있다가, 올해 초에 오포세대를 처음 들었는데 이번에는 엔포세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뭘 더 포기해야 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암울하고. 이제 진짜 졸업하면, 주거비까지는 지원받겠지만, 생활비는 학자금대출에서 받는 거니까 졸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출금 갚아야 하고. 암울한 것 같아요. 이대로 생각하면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그런데도 그냥 적은 일자리 가지고 경쟁하는…답답하죠…네…엄청… 그 생각 엄청 했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다들 살기가 편해지나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혜진)

불안한 게 **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불안한 걸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학 자체가 또 살기도 딱딱한데, 대학원 가려고 하니까 ‘대학 내내 뭐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딱딱한 와중에 ‘뭘 또 해야 됐는 거였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대학 다니는 동안 더 스펙을 쌓아야했나… 대외활동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수진)

대학생들이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잖아요. 일자리는 없고 이런 것들인 건데. 대학이 그걸 창출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학에 엄청나게 많

은 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확실히 엘리트가 된다가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민지)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취업준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다. “좋은 학교가 다가 아니란 것은 알겠지만, 너무 불안”하다는 혜진(여, 3학년)은 일전에 한 택시 기사에게 들었다는 말을 떠올렸다. “중앙대 다닌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 아들딸이 한 명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다니고 한 명은 순천 교대인가를 갔는데 개만 취직했다고. 중앙대 애는 취직 못 했다는 거예요.” 혜진은 대학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대학생활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유정(여, 4학년)은 다양한 인문교양을 강조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육에 대해서 “재밌다, 유익하다,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근데 또 하는 말이 내가 이거에 시간을 정말 많이 들이면서 불안하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두 학생의 사례는 취업 외의 다른 고민을 할 수 없는 현재 대학생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안은 대학을 다니고 있음에도 아직 확실한 취업과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나’의 계급적 위치 자체에 대한 불안이며, 현재의 대학생이라는 유예된, 불안한 위치에서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공포이다. 즉, 향후의 생애전망 속에서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계급적 위치로 이동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불안이다. 그러나 서동진(2003:107)이 적실히 지적하듯, “노동의 세계로부터 배제된 자들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비 백수’라는 표현이 드러내듯, 오늘날의 노동 현실에서 노동시장의 안과 밖, 취업과 실업 사이, 대학생(취업준비생)과 백수의 거리는 대단히 밀착되어 있다. 그들은 ‘나’와 닮았고, 누구라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계발하고 혁신할 것을 요청받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하는 주체들이 겪는 신경증의 대상”(서동진, 2003:108)에 가깝다.

학교생활의 ‘빡빡함’을 이야기하는 상진(남, 2학년) 역시 이제는 휴학하는 것조차 취업을 준비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이 뒤쳐

지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자동기 한 명 친한 애가 휴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휴학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과, “휴학이라는 거 자체가 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역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딱딱하죠... 그 친구가 휴학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웃긴 것 같아요. 휴학이라는 거 자체가 쉬자고 하는 건데, 쉬면 안 되는 게 웃긴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토플이니 뭐니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휴학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취업할 때 휴학하고 ‘뭐 했냐’ 이런 질문 들어온다고, 그러면 진짜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학교 쉬었다고 하면 뒤쳐지는 게 된다는 게... (상진)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적 불안이 어떻게 개인들에게 체현되는지를 보여준다. 강수돌 · 하이데(2009)는 한국사회가 노동 상실에 대한 공포 속에서 노동에 대한 증독을 기초로 작동하고 운영되는 사회라고 진단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를 잃을까 봐 갖는 두려움, 내 소득이 없어졌을 때 내 가족이 노숙자처럼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박히는 일종의 집단적 상흔이 발생했다(엄기호, 2009:121에서 재인용). 한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와는 달리, 경제위기 이후에는 “부도와 파산,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평범한 누구의 삶에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 되면서 경제적 몰락에 대한 공포는 대단히 실제적인 공포가 되었다(엄기호, 2009:104). 문제는 이러한 공포가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기 전인 대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공포가 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 성장기에 풍요롭고 자유로운 유년기를 보냈으나, 청소년기에 경제위기의 영향을 실제로 체감해야 했던 오늘날의 청년세대에게서 더욱더 규범적인 생애 트랙에 진입하고자 하는 (혹은 그로부터 이탈하지 않고자 하는) 강박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실업이 아니라 취업이 예외가 된”(엄기호, 2009:99)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어떻게든 대학을 다니는 동안 ‘스펙’을 쌓아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면, 일찌감치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는 강박감이 점점 커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구조적 변화 없이는 더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대학을 다니며 각종 '스펙'을 더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대학생이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누릴 수 없다는 데 있다. 규범적인 '삶의 안정'에 대한 욕망과, 그에 닿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현실 사이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구조적 불안이 발생한다. 한국사회는 대학이라는 공간을 더는 청년층 다수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곳으로, 취업을 위해 유예된 곳으로 재구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문제 삼는 지점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러한 대학생들의 불안에 편승하거나 이를 재생산하면서, 개별 대학생 주체들이 '각개돌파'의 방식으로 이러한 불안에 대응하게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지(여, 4학년)는 “사실상 취업준비를 각자 각개돌파”하는 것이 현실이며, “학교의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고, 취업에 대한 기본적 정보 같은 것도 각자가 다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인재역량 관리에 개인별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원(남, 2학년)처럼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더 많은 학생은 대학이 취업지원 정책을 통해 오히려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조장하거나 불안에 편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는 중앙대가 되게 취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그런 (대학생의) 불안감을 줄여준다고 하는 선두주자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레인보우시스템으로 관리해주겠다고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취업경쟁력 높이고 성적인플레 없애서 딱 신뢰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고. 경쟁적인 방식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앙대만 취업이 잘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민지)

그런 거(불안감)를 표면적으로는 줄여주려는 척을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라든가, 저희 중앙대만 하더라도 회계나 이런 거 일부러 하

려고 하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과연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진)

대학마다 건물 벽에 “취업률 O위”라는 구호에서부터 “고시 OO명 합격”, “대학평가 O위”까지 온갖 선전물이 넘쳐난다. 취업률을 높여 대학평가 순위 올리기에 급급한 대학 정책의 기초는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고 오히려 대학생들의 불안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 입학에 준비하는 수진(여, 4학년)은 대학 서열화의 문제가 자신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출신학교에 대한 편견이 걱정된다고 했다. “사회에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편견을 먼저 지고 가야 하는 게 너무 마음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엄기호(2010:42)의 지적처럼, 대학생들의 정체성이 “대학의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 체제 ‘안’에서 내가 다니는 대학이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연고대를 다니면서도 서울대 근처만 지나가도 ‘꿀린다’는 학생들이 허다한 현실”(엄기호, 2010:46)에서 꼭대기의 딱 한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패자를 만들어버리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취업률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 대학들의 행태가 갖는 모순을 드러낸다.

IV. 학생이 꿈꾸는 대학

1. 청년이 기대하는 대학의 역할
2. 대학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IV. 학생이 꿈꾸는 대학

1. 청년이 기대하는 대학의 역할

그렇다면, 현재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학생이 꿈꾸는 대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며, 이들은 대학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상진(남, 2학년)처럼 교육적, 학문적인 측면에 집중해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어야 하며 “내 의견이 생겨날 수 있는, 내 주관이 생겨날 수 있는 공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수진(여, 4학년)처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간형을 배출”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수진은 고등학교까지의 입시 위주 교육이 “우리 사회 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간형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각자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은 다양했지만, 현재의 대학교육이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적 인식이었으며, 이들은 오늘날의 대학이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민지)이지만, 그럼에도 불안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고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구조적 불안을 대학 자체가 해결해줄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알게 되면, 조금은 현실을 다르게 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진짜 불안한데요. 1~2학년 때는 막연하게 불안하고, 3학년이 되면 (불안감이) 확 오잖아요? 4학년 때는 초탈하고 해탈하고 아 몰라(웃음)…. 근데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도 잘 느껴지는 바가 없고, 그런 것들을 진짜 열정적으로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 전 불안해도, 그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고민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민지)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대학이 ‘실업자’와 ‘취업자’만을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을 키워내는 역할, 즉 대학 역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

는 데 필요한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민지(여, 4학년)는 대학이 어떤 사람들을 키워내고 사회에 배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주입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왔는지,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논쟁의 역사와 논쟁적 지식을 갖고 우리가 직접 입장을 만들어서 토론해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사회 조건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 사실 시민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시민이 아니라 실업자와 취업자만 키워내는...** 자기 삶의 조건, 지금 시민의 존재조건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 내는 게 (대학의) 하나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지)

단지, 대학만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대학 내에서 일단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취업이 바로 목표가 되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살고,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론장이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이 그런 장소가 된다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수진)

대학이 가져야 할 가치는 '인간다움'이고, 대학이 사회적으로 해야 할 역할도 '인간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수진)

민지(여, 4학년)와 수진(여, 4학년)은 “시민의 존재조건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며, “내가 누구고 어디에 살고 무엇이 문제이고”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론장이 대학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을 위한 실용적 교육을 넘어,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겪을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미리 시민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대학은 ‘권리’를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제가 요새 인터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노동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된 건데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굉장히 당연한 권리인데 그거 자체가 권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부당한 처우 속에 있는데도 이게 부당한 처우고 내가 이의를 제기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작 정말 초중고에서 해야 했을 교육들, 노동권에 대한 것들, 인권에 대한 감수성, 섹슈얼리티 교육, 이런 것들이 진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국·영·수·사·과에만 목매고 있으니 그걸 알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교육받지 못하고 대학에 왔을 때 대학에 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커버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 대학마저도 이런 거를 못하는 거죠. 대학 교양과목에서 해줘야 할 역할들이 딱 그거, 현실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그런 역할인데, 지금 회계를 하라 그러고...** (지은)

이들이 원하는 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은, 각자의 권리를 인식하게끔 하는 교육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민주적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대학에서만큼은 “원래는 권리이지만, 포기하거나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이를 가르쳐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학생들은 얘기했다. 학교가 지원하는 취업설명회에서 ‘어떻게 하면 입사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취업 관련 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이나, 혹은 드라마 <미생>에 나오듯 “일하는 것이 실제 어떤 삶인지” 알 수 있게 해주거나 노동권의 문제를 인식하게끔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 취업을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로 인해 다양한 사회진출의 가능성이 획일적인 경로로 축소되고 있는 측면에 대해 많은 학생은 대학이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영수(남, 2학년)는 경영대 열람실에 가면 한쪽은 회계사, 한쪽은 세무사 준비만 한다며, 학생들의 생각이 계속 “고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뭐라도 한 개 해놔야겠다”는 조급함에 학과 학생의 8할 이상이 공인회계사를 준

비하다가, 잘 안 되면 “아무 데나 들어가자, 온갖 자소서(자기소개서) 쓰고 하나만 걸러라”하며 천편일률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에서 모두가 한정된 미래 경로만을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혜진(여, 3학년)과 유정(여, 4학년)은 다음과 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취업 말고 진학하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공부하려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을 위해)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강도 거의 기업 취업이나 기업인사 특강으로 이뤄지고. 그러니까 고시 아니면 취업, 이거니까 그게 아쉽죠. 학교에 행사반, 입시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엄청 에이스사업이나 레인보우시스템 이런 거 학교에서 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취업역량 키우기, 창업워크숍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것 말고도 삶의 진로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게, 그런 것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혜진)

취업이라는 게 직장을 얻는 건데, 기업에 월급쟁이로 취직하는 것만이 취업은 아니잖아요. (대학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고민하게 하고, 돈을 버는 그런 대기업이나 은행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정)

많은 학생이 다양한 사회진출과 삶의 가능성을 지원해주는 대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수(남, 2학년)는 대학생이 “자소서 쓰는 기계”로 전락했다고 자조적인 진단을 내렸다. 이런 사실은 학생들의 삶이 대기업 취업준비, 고시준비에 쏠려있는 대학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낮은 청년고용률, 성인기 이행 과정의 붕괴, 안정적 미래 설계의 불가능성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은, 청년들에게 치열한 생존이 아니면 처참한 도태를 종용한다(류연미, 2014).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대학에서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2. 대학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이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현재 한국 대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대학이 시민을 양성하고 깊은 학문적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사회진출과 삶의 가능성 실현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대학에 와서 내 전공의 전문가가 될 줄 알았는데 시험 치르고 나면 다 까먹고 공부한 게 도통 기억에 남아있지를 않는다. 졸업할 때쯤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한 철호(남, 1학년)를 비롯해 면담자의 대부분은 대학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신이 대학을 바꾸는 주체로 나서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우리는 앞에서 학생들이 제기했던 대학의 문제-교육권, 학생복지, 사회권, 대학 내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지만, 이를 드러내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간극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취업과 아르바이트 등 먹고사는 문제에 바쁜 탓일까. ‘수저계급론’⁸⁾까지 등장한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 그들을 그저 순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수저계급론의 등장은 한국사회 청년층 내부에서 개개인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개인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불러온다. 2년간 청년빈곤 취재에 몰두해온 안수찬(2011)은 김영삼 이후 김대중 ·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완성된 현재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의 경쟁력 확보를 인생의 목표로 삼도록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대학 안에서 기회의 좌절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

8) 2015년 하반기부터 한국사회에 등장한 신조어로 다이아수저 · 금수저 · 은수저 · 동수저 · 흙수저 등 수저의 재질로 자신의 선천적인 사회적 계급을 표상하는 담론을 일컫는다. 즉, 청년들은 부모의 재산과 직업에 따라 자기 자신을 구분 짓는다. 금수저와 흙수저는 태생부터 다르다. 계급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경제적 조건이 아니다. 교육환경과 주거지역, 직업과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전부가 계급을 구별 짓는 기준이 된다.

는 김현미(2015)는 한국에 '인력자원'과 '인재개발'이란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교육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대학을 바꾸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5년 3월 희망제작소가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광복 100년 소설 픽션' 조사 결과를 봐도 이러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 항목을 살펴보면 '경쟁과 편견', '패배감'이라는 답변이 43%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한국형 신자유주의 문화가 능력주의와 자기계발 논리 속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유혜승 외, 2015).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2015년 청년 조사 결과에서도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중산층 이상 청년들의 78.5%가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낙관했지만, 중간층(67.9%), 중하층(55.3%)으로 갈수록 낙관적인 전망이 줄다 빈곤층에서는 '희망이 없다'(52.2%)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기울었다.

대학 내에서 입학전형에 따라 학내의 신분계급⁹⁾을 나누는 것 같은 구별 짓기 관행은 이미 학생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이들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청년들의 자조하는 현실을 반영한 계급표는 학교는 물론 직업, 자동차, 거주지 등에 따라 청년들의 계급을 구분한다. 청년들의 자조는 '잉여'에서 '삼포세대'로, 다시 '수저론'으로 변모했다. 오찬호(2013)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교 서열, 직업, 브랜드 등이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승자'의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별적 보상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곽금주(2015)는 청년들이 현실과 구조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줄세우기식 서열문화'로 인해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시위 등의 적극적 요구가 아닌 자조적 인식으로 변했고, 이는 '인정 욕구'와 '불안감'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9) 정시·수시 입학생 등은 신라 시대 골품제에 빗대면 '성골'이고, 교환학생 등은 '6두품', 편입생과 특별전형 입학생은 '5두품' 계급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사이에도 차별이 생기고 있다. 정시 입학생들은 자신보다 수능 점수가 낮은 수시 입학생들과 자신을 구별 짓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시나 특별전형 입학생을 비하하는 의미로 '수시충(蟲)', 지군충(지역균형선발)', 기군충(기회균형선발)'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엄기호는 20대 담론을 다룬 저서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에서 ‘원세대’¹⁰⁾ 학생들이 매일 아침 통학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느끼는 처절한 열등감을 생생하게 보여준 뒤 이러한 대학 서열체제는 본교와 분교, 명문대와 지방대라는 이분법을 넘어 그 사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을 안겨준다고 말했다(2010). 면담자 영수(남, 2학년)는 “몇 년 전, OO캠(지방캠퍼스)에 있는 국제경영학과를 서울캠(서울캠퍼스)의 경영학과와 동일하게 인정하겠다고 했을 때 경영학과 학생들이 데모와 서명운동을 벌여서 한 달 만에 방침이 폐지되었다”는 경험담을 들려줬다. 청년 모두가 위계화된 정체성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나 하면, 수능 올 1등급을 맞았을 때 OO대 경영학과에 올 수 있다고 치면, OO캠은 3등급 맞으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취할 때 어떤 사람이 ‘국제경영’ 나왔다고 해도 이력서상에는 ‘경영’이라고 되니까, 경영학과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까놓고 얘기해서 동기 중에 재수한 애가 있어요. 근데 개는 ‘재수 안 하고’ 국제경영 갔어도 됐다는 애기죠. 애는 좋은 학과 가려고 재수까지 했는데, 격차가 있는 두 개의 학과를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1년을 날린 셈이 되는 거죠.** (영수)

대학이 학문을 탐구하는 지성의 전당이 아닌 더 나은 상품가치(학벌)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로 전략하는 순간 절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잉여’가 된다. 이 치열한 제로섬게임에서 도태된 패배자들은 ‘착취당할 권리’라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때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서의 ‘자유’는 자신의 ‘뒋’이 된다. 전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의 책임이 이 ‘자유’라는 족쇄를 통해 철저히 개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학에서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의 파괴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내 구성원 전체가 개별화된 이해관계에 따라 고립된다. 교수와 학생 사이는 서로 학점과 수업평가를 교환하는 사이로 격하되었고, 학생들은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인 학내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연대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10)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비하하는 은어.

앞으로 대중대학의 시대를 지나 어느 시기에 이르면 한국에 남게 될 대학에는 ‘성균공고’¹¹⁾, ‘경희고’¹²⁾, ‘흑석상고’¹³⁾의 세 가지 유형만 존재할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돌고 있는 지경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와 현실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사회가 어떻든 간에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부각될 뿐이다. 최철웅(2014)은 빈곤과 실업의 원인으로 교육의 위기, 즉 ‘인적자원’의 비효율성을 지목하는 것은 사태의 책임을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장하성(2015)은 젊은 세대가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남보다 더 노력하면 ‘나만은 된다’는 긍정의 믿음을 갖게 되어 자신을 짓누르는 것조차 긍정해버리는 ‘긍정적 노예’가 됐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긍정의 배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이 꿈꾸던 대학이 고등학교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고 기업화된 대학에서 지식은 ‘상품’으로 변해있음을 느끼면서도, 대학을 “취업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격증” 내지는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며 대학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응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밝혔듯이 이미 한국 대학은 ‘경쟁’을 넘어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기는 하지만 막상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도 모른 채, 나아갈 방향도 없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을 양손에 들고 있는 형국이다. 면담 대상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두 대학에 와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사회에 나가서 어딘가에 써먹고 자기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그저 명함 하나, ‘나 00대 나왔어요!’, ‘어느 과 나왔어요!’로 삼는다는 것이예요.** 학생들은 모두 취업준비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학원에 가든가, 취업특강 같은 걸 들으러 다니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가. 그래서 **대학수업이나 대학 내 커리큘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친구를 이제까지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영수)

11) ‘성균관대-이공계-삼성’을 뜻함.
 12) ‘경희대-인문학 중시-휴머니티스 칼리지’를 뜻함.
 13) ‘중앙대-상경계-두산’을 뜻함.

대학에 입학하고 수업을 들을 때 공부가 재밌다는 걸 느끼게 해 줄 인프라가 있다면, 취업은 두 번째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수업이 없으니까, 일단 나는 살아야 하고 그러면 학점이라도 잘 따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나중에 취업에 써먹어야지, 학점을 잘 받아야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수업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상진)

오찬호(2015)는 물적 개념인 스펙¹⁴⁾이란 단어가 인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취업 3종 세트’¹⁵⁾가 ‘취업 9종 세트’¹⁶⁾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들어 이러한 현실을 설명한다. 이는 [표 4-1]의 주요 대학별 졸업요건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지난 1996년 성균관대가 도입해 대부분 대학으로 확대된 ‘졸업인증제’는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았다(손현경 외, 2015). 이 가운데 ‘영어졸업인증제’는 국제화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급속도로 확산했다.

최근에는 취업 우선주의에 밀려 학부 졸업논문마저 폐지 또는 간소화하는 추세이며, 졸업인증제가 사실상 ‘손쉬운 졸업’을 돕는 장치로 전락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의 토익점수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우희, 2015). 오찬호(2015)는 대학이 학생의 경제력과 영어성적의 상관관계를 알면서도 영어가 ‘공식 스펙’의 하나가 되도록 내버려 두고 조장하면서, 학생들이 영어 대신에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손실’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14) 스펙(spec)은 specification의 줄임말로 명세서나 설명서를 뜻하는 단어이다.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의 제품 사양을 말할 때도 스펙이라는 단어를 쓴다. 한국에서 스펙이라는 단어는 구직자의 학력, 경력, 외국어, 자격증 등을 아우르는 뜻을 가진 신조어의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이 정도 스펙이면 지원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구직자가 입사 전까지 확보한 모든 조건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오찬호, 2015에서 재인용).

15) 학벌, 학점, 영어점수.

16) 학벌, 학점, 영어점수, 여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봉사활동, 성형수술.

대학	이수학점	영어강의 (공인외국어점수)	기타사항
서울대	130학점	전공과목 포함 3과목 이상	심폐소생술 자격증 획득을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중
KAIST	130학점	영어 필수 4과목 / '영어능력졸업요건제'(토익 775점)	즐거운 대학생활 및 신나는 대학생활: 2011학년부터 2학점 이수해야 함
포스텍	120학점	'영어인증제 등급테스트'(1~5등급)를 통과해야 함	화학과는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연세대	135학점	영어강의 2과목 이상	채플, 제2외국어(중어/독어/불어/노어) 6학점 필수
서강대	130학점	영어전공강의 5과목 이상	사회과학, 경제학, 경영은 졸업이수학점 126학점
성균관대	120학점	07학번 입학자부터 '국제어 학점' 충족	삼품제도(인성품/국제품/창의품) 획득해야 졸업
한양대	136학점	영어졸업인증제(TOEIC) 폐지	2016년 신입생부터 중국어를 대학졸업 필수과목으로 함
중앙대	132학점	전공과목 영어강의 3과목 이상	토익 인문대학 600점, 경영경제대학 글로벌금융학과 900점
경희대	130학점	단과대학별 자율운영체제	토익점수, 졸업논문 반영 안하는 학과 다수
한국외대	134학점	실용외국어 4학점 이상 (일반대학: 토익 710점 이상 공통)	07학번부터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필수 항목 폐지
서울시립대	130학점	교양필수 영어 3학점 이상	2015학년 신입생부터 사회봉사 30시간 이상해야 졸업 가능
건국대	124학점	전공 3과목 영어 강의	
숙명여대	134학점	2010학년부터 학교측이 자체 개발한 메이트(MATE: 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 필수, 공인영어인증시험 대체 불가	기본적으로 자체 시행 중인 졸업인증 영어시험 메이트(SMU-MATE)라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함

[표 4-1] 주요 대학별 졸업요건 (출처: 『한국대학신문』, 2015.05.10)

V. 대학 변화의 주체와 방법

1. 혁신 주체에 대한 인식
2. 학생사회의 탈정치화: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
3. 학생자치 가능성의 탐색

V. 대학 변화의 주체와 방법

1. 혁신 주체에 대한 인식

대학을 바꿀 주체로 ‘학생-교수-정부-학부모’¹⁷⁾, ‘학생-교수-교직원’, ‘학생-교수’라고 꼽은 학생도 일부 있었지만, 면담을 진행한 학생 대부분은 공통으로 대학혁신의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대학은 기업이나 공장이 아니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대학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혜진(여, 3학년)을 비롯해 면담자의 대부분은 대학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성원은 ‘학생’이므로 대학을 바꾸는 주체 또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문제에 대해 저항해본 적이 없거나 학생회 활동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명확히 존재했다.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죠. 주체는 학생인데, 학생들은 그걸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수진)

독일에서 대학등록금 인상한다 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달 용돈 정도였는데.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교수들이랑 같이한 거잖아요. **학교를 바꾸려면 학생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난 시절에 대해 불만도 없을 테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자기 공부하기 바쁘고 당장 앞날 챙기기 바쁘는데 뭔가 뒤집으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거는 기대는, 그저 지금 학생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10~20년 사이에 국가의 요직으로 발돋움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예요. (재원)

한 중앙대 학생은 ‘학생’과 ‘교수’가 함께 대학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위력

17) 학생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고, 교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외쳐야 하며, 정부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고, 학부모는 비싼 학비 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학생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학생’이 대학혁신의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저는 학생이랑 교수가 핵심고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초 구조조정 사건 때 교수들이 개입한 게 엄청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었어요. 2010년에는 교수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교수들이 움직이니깐, 역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깐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학생들이 움직였을 때는 안됐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는 정말 실망감과 속상함을 많이 느꼈어요. 교수들은 어쨌든 실제로 대학 운영이라든가 구조를 확실히 학생들보다 잘 알고, 실제로 개입할 수 있기도 하고, 교육의 내용을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수들이 학생들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수들끼리는 움직일 수 있는데, 뭐랄까 수업내용을 바꿔볼 수 있고 본부 운영에 개입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사실이 학생들은 같은 학생 주체를 통해서만 모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민지)

민지(여, 4학년)의 이야기는 대학을 바꿀 힘이 없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현재 학생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면담자들은 공통으로 학생이 대학을 바꿀 주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 또한 토로했다. 학생들이 이미 대학이라는 ‘사회’에 속해있고 대학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회준비생 내지는 예비생 정도로 인식하고 소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학생들 스스로 대학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대학)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주체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오로지 개인적 해결책만을 추구하면서 불안의 시대를 건너가고자 하는 것이다.

2. 학생사회의 탈정치화: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

면담을 진행한 학생들은 대학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나서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학생들이 제시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파편화된 학생사회’와 ‘취업준비로 인해 다른 문제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는 현실’. 그리고 ‘어차피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냉소적인 태도’.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학생들은 대학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2015년 12월, 칠레에서는 국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6년에는 칠레의 공교육 강화를 요구한 10대들의 ‘펍권혁명’이 있었고, 2011년 봄에는 급기야 수십만의 학생들이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교육개혁시위를 펼쳤다. 학생들은 수백 개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점거하고 다양한 시위와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 활동을 펼쳤다. 계급 차별적인 고등교육시스템에 저항한 학생시위는 전국적으로 사상가, 예술인, 교육자, 인문학자 등 20만 명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의 해임으로 학생운동은 첫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2010년에는 방글라데시¹⁸⁾, 필리핀¹⁹⁾, 코소보²⁰⁾, 스리랑카²¹⁾, 미국²²⁾, 크로아티아²³⁾, 오스트리아²⁴⁾, 독일²⁵⁾, 영국²⁶⁾, 인도네시아²⁷⁾, 러시아²⁸⁾, 네 팔²⁹⁾, 시에라리온³⁰⁾, 스위스³¹⁾, 이탈리아³²⁾에서 교육 시장화에 반대하는 교

18) 대학생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

19) 교육을 위한 국가 행동의 날 선포 및 전국적 동맹휴업. 등록금 인상과 공공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 확대를 위한 투쟁.

20)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국가는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21) 교육의 사유화와 정부의 대학 관련 예산 삭감 반대시위.

22) 교육예산 삭감 및 확대되는 사유화와 공공교육의 시장화 반대 시위.

23)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시위.

24) 자유로운 교육을 위한 시위.

25) 전국 규모의 교육투쟁회의.

26) 등록금과 지원금 삭감에 반대하는 국가적 캠페인 발의.

27) 등록금 인상 반대와 자유로운 교육을 위한 집회.

28) 교육의 상업화 반대시위, 공공기관의 사유화를 위해 통과된 법에 대항한 플래시몹과 거리공연.

29) 국제 네팔 학생조직의 자유롭고 참여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30)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 행사 일부로 행동 조직.

육투쟁이 벌어졌다.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난 데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정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모두가 바라는 일치된 ‘목표’와 ‘지향점’이 존재한다면 언제든 광범위한 저항의 물결로 확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사회에서는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대학의 목적은 취업을 위한 직무교육만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이윤과 경쟁의 논리에 종속되면서 제대로 된 고등교육도 받지 못한 채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학문적 교양과 비판적 지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연대감을 습득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오로지 개인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면서, 기성질서에 대한 순응과 복종의 태도만 양산되고 있다. 대학의 변질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30여 년간 정부와 기업의 공모 하에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각각의 국면에서 교수와 학생들은 나름대로 저항했으나 결집력 있는 연대를 이루지 못해 결국 교육에 대한 권리를 하나둘 잃어갔다. 그 결과 저항에 대한 냉소주의와 패배주의가 깊이 침투한 것도 사실이다.

효율을 앞세운 ‘개혁’과 자율을 중시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대학 내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알고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기성질서에 순응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면담을 통해 뚜렷하게 증명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①먹고사는 문제(취업과 학점), ②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③파편화된 개인주의, ④레드콤플렉스, ⑤무관심·무관계의 다섯 가지로 집약되는 원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면담자 전원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 사회구조 아래 순응하고 있었다.

먹고사는 게 힘드니까요, 계속 경쟁을 하잖아요. (철호)

31) ‘우리의 대학’ 조직 거리공연.

32) 국제학생의 날(11월 17일)에 대중적인 교육투쟁.

가장 어려운 건 그거죠. 지금 처해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사실 뭐, 바꾸자고 소리를 내고, (그러기 위해) 학점이나 이런 걸 포기한다든가 알바하는 걸 포기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만큼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이 그나마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실 대부분의 대학생이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자금 대출받거나 알바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알바하고 학점 떨어지면 국장(국가장학금) 못 받으니까 학점도 신경 써야 하고. 근데 거기다가 데모까지 진행하려고 하나...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 생각하면서 외부활동 해야겠다고 하면, 손이 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다가 영어도 해야 하고 요즘에는 한자도 해야 하고. 너무 바쁘죠. (상진)

특히, 학생들에게서 대학의 여러 문제를 자신이 지금 개입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학생들이 나선다고 해서 취업시켜주는 것도 아닌데”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팍팍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대학문제의 제삼자로 위치시키는 것이 편하다는 대답도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오로지 의사 표현뿐”이라고 답한 영수(남, 2학년)는 학생은 요구만 가능하고, 실행과 추진은 학교가 담당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만드는 주체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의 기저에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통과하며 자란 청년세대의 삶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존재한다. 대학본부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뒤에 이어진 “이 학교에 뼈를 묻을 것도 아닌데”라는 학생들의 말에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객체로서의 인식이 깔려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비판 능력을 갖추는 것이 소중하다는 인식조차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저희 과가 진보적 내용을 배우는데도 3, 4학년은 집회도 안 가요. 분명히 비판적인 것을 배우지만 노사정 대타협된 거 모르는 애들도 많은데요. 다 바쁘거든요... (중략)...대학생들이 정말 엄청 바빠요, 진짜 바빠요. 알바를 하면 무척 바쁘고. 알바를 안 해도 이 활동하지 저 활동 하지, 또 활동을 안 해도 팀플만 해도 진짜 바쁘거든요. 팀플이랑 과제만 해도... 이거 한다고 어차피 내가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무력감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졸업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민지)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니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나는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애들 힘들어하는 것도 알겠지만, 애들이 바꾸고 고치겠다고 나가서 힘들어하면서 돌아오는 것도 보기 싫고. 동시에 지금 당장 내가 대학교 문제 안에 있지만, 그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제삼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웃긴 거 같고...(중략)...내가 와 달을 때까지는 그렇게 큰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 딱딱하죠. 그만큼 시간을 쓸을 생각이 없다는 거. 여유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상진)

학생이 대학혁신의 주체로 나서기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일말의 주저도 없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꼽은 면담자의 발언은 앞서 언급한 ‘먹고사는 문제’나 ‘취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필요성은 느끼지만,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데 대학의 미래 따위에 관심 갖는 일을 ‘여유’와 ‘사치’라고 여기는 대다수 학생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에 대해 ‘용기’가 필요하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다들 동아리 이런 거는 빨리빨리 손 떼야지, 취업해야지, 이게 원래 3학년 때 회장을 했는데, 2학년이 회장을 하더니 1학년들이 회장 되고. 다들 빨리 취업해야지, 그런 건 손 떼야지 그런 게 심해지는 걸 보면서, 아 공동체가 다 죽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요? “졸업 안 해? 정신 차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애기 많이 들어요. (유정)

문제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설 용기도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너무 할 게 많은데, 남들은 토익, 토플 1점이라도 더 올리고 있는데 내가 한들 이게 뭐 달라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것 같고. 저는 딱히 스펙을 쌓아야한다는 생각보다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가영)

학우들에게 ‘넌 대학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 나 먹고살기도 바빠”, “내가 지금 내 미래도 모르겠는데,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대학의 미래까지 걱정해줘야 하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수진)

다 저랑 비슷할 거 같아요.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보다 자기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취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 만족감이 안 느껴지는 상태에서 자기 먹고살기 바쁘데,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원)

학우들에게 '대학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한 학생은 늘 "지금 내 미래도 모르겠는데,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내가 대학의 미래까지 걱정해줘야 하느냐"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한다. 대학은 학생들이 속한 '공동체'이지만, 학생들은 대학을 '공동체'로서 인식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경험담이다. 대학은 그저 내 돈을 내고 소비하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경쟁사회에서 홀로 살아남기를 요구받은 학생들은 학내 사안의 해결이 자기 삶의 문제 해결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이야기들은 일부 학생들이 지적한 '파편화된 학생사회'와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 '문제'가 있어도 '나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대학사회 내 팽배하다는 지적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특별한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청년세대의 성향과 연결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70~8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재, '대학생'은 더는 과거처럼 '비판적 지식인'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학생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청년실업이 상징하는 불안정 노동과 삶의 불안정성은 대학생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신을 '취업준비생'으로 자리매김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에만 몰두하도록 부추긴다.

한편, 학생운동 경험자들은 한국사회와 대학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한 '레드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학생운동은 과거의 방식과 기획을 답습하는 낡은 것이라는 프레임과 함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빨갱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대학사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고립될까 봐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민지)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죠. 왜냐면 낙인이잖아요.
(민우)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힘든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다들 학생운동 해도 취직 다 됐잖아요. 그냥 고정관념이요, 학생운동에 대한 고정관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빨갱이들이다, 고집부린다, 이런. 앞에서 대놓고는 안 하는데, 요새는 심지어 익명 게시판에서 얘기할 때 학생회를 두고 ‘O베’(학교이름 앞 글자를 따서 일베에 빗대어 비하하는 표현)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혜진)

학생운동 중에서 그나마 학생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가시적인 제도적 성과를 따내는 실리주의적 운동뿐이었다. 이러한 사고는 학내 민주주의 문제를 주장하는 학생운동세력이 학생들에게 접근할 때 “등록금을 학생이 내니까, 차라리 주주의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정호, 남, 4학년)는 의견으로 이어진다. 정호는 학생을 ‘주주’로 보는 시각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학생을 주주나 소비자라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자치의 문제 해결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본부와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갑과 을 관계이거나, 또는 어디가 힘이 더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은 ‘졸업장 장사’를 하는 거고, 학생은 ‘구매’하는 게 자기한테 이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니는 거고, ‘구매 관계’인 것 같아요. (민우)

정권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한국 대학과 교육에 대해 학생들도 모순을 느끼고 있지만, 머리로만 인식할 뿐이다. 학생들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남기 위해 결국 지배 이데올로기에 편입하거나, 문제 자체를 자신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사회에 순응하는 길을 선택한다. 이렇게 수동적인 자본형 인간을 양성하는 대학과 교육 전반에 종속당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시야를 넓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학 전체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은 자리 잡기 힘들다.

3. 학생자치 가능성의 탐색

이렇듯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자기계발에 골몰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이 대학을 바꾸는 주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대부분 학생은 학생회라는 학생대표기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현실에서 학생회가 ‘무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학생회는 자체적인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나아가 선거기구까지 포괄하는 복잡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 규모 또한 크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대표성, 정당성을 요구받고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을 하나의 ‘스펙’으로 여겼다. 또한, 학생들이 학점관리 때문에 학생회에 참여하지 않고, 학생회 활동에도 무관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애초부터 학생회 선거에 참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학생회이기 때문에 신뢰 또한 없다고 했다.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은 이렇게 반복되고 확산한다. ‘학생회 조직이 대학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답변이 돌아왔다.

학생회 조직이 대학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취업해야 해서 (학생회 활동을) 다들 꺼리기 때문에 그걸 꺼리지 않는 사람이 학생회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학생과의 교류도 없게 되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학생회가 주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진)

총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들은 개개인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학생조직이나 학생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금방 찾을 수 있는 창구 중의 하나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운동화하고 학생들을 동원하려고 하고 힘을 요청해야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군중 속의 한 명으로 존재하는 학생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고. **공공대다가 마는 거죠. 졸업하면 그만이지. 학생회가 담론을 만들고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태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
죠. (지은)

학생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현재 실추된 학생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교육권 확보를 위해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함축하고 있다. 학생회가 이제 사회운동 전위로서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시대적으로 광범위한 교육권 운동의 주체로서 대표성을 요구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원익(2015)은 대학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교육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가지 혁신적 아이디어를 던진다. “학생회 선거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까지 일정 부분 참여할 통로를 만들고, 그것이 이사회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것으로 대학의 사회적 공공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개인의 필요 때문에 소비하는 무엇으로 인식하는 학생사회에 대해 수진(여, 4학년)은 “모든 문제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한다고 대학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수진은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학생자치를 이루어낼 수 없고,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대해야 학생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론의 장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중략)...많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다양하고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고, 깊은 대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렇게 대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진)

수진은 공론의 장이 존재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극명한 차이를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들려주었다. 그는 대학 초년생 시기에는 대학문제에 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다 주위 사람들과의 토론으로 인해 자신이 대학문제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학습의 내용과 대학생활 또한 변했다고 고백했다. ‘참여’로 인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야기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저는 혼자서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주위에 그런 토론하고 토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생각이, 제 주장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진보, 보수 이렇게 있겠지만, 저는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내 의견이 없었던 것을...(중략)...계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이미 주변에 있었고, 가서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 교수님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얘기해주셨던 것 같아요.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수진)

수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론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은 비록 지향하는 방향이나 가치는 각기 다르지만, 대학마다 존재한다. 대학 기업화 문제가 심각한 중앙대의 '자유인문캠프' 기획단 활동,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희대의 「미래대학리포트」 학생위원 활동 등을 통해 비록 소수지만 대학 구성원이 함께 연대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며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면담을 진행한 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행동하는 학생들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대답했는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될수록 참여비율이 높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고학년일수록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더라도 개인의 생존문제가 직결된 취업준비를 뒤로한 채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는 '같은 학생들'이라는 대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수년간 학생회 활동을 이어온 중앙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실 수업만이 다는 아닌 거고 수업 여섯 개 이외의 '남는 시간'이 대학이 저한테 준거라고 말했었는데. 수업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외에 팀플, 과제, 알바도 하고, 학내외 행사 참여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채워지는 시간이 많은 거죠. 방학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인 거죠. 수업은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안 듣는 거고. 그런 시간을 학생자치로 모아낸다거나, 아니면 수업도 교수들이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교수들은 우리의 입장을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수업을 바꾸는 건 20시간만 바꾸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바꾸고 요구하는 건, 파편화되어있고 불안한 자기 삶을 바꾸고 싶어 모인 학생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직은 힘이 많이 없지만. (민지)

‘자유인문캠프’는 2010년 여름 중앙대의 기업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 의식을 공유한 대학생들이 트위터로 만나 결성한 커뮤니티이다. 학생들은 자기계발담론에 저항하는 ‘자기-교육’을 모토로 직접 방학 때마다 인문학 강좌를 기획 · 개설하고 있다. 기획단은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배움을 알리고, 주변의 ‘좋은’ 교수님들께 학교 수업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자는 목표 아래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여름 중앙대의 기업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시위, 징계. 일련의 과정이 지나고 소강상태에서 학교 분위기는 무기력했습니다. **저항할 의지를 잃거나 무관심해진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_최철웅(자유인문캠프 제안자)

‘자유인문캠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의식을 느꼈으나 쉽사리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자유인문캠프가 하나의 소통창구가 됐기 때문이다. 자유인문캠프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학내에서 학교문제에 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다른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조직들-‘돌곶이포럼’, ‘공동생활전선’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학내에서도 인문대 · 사회대 · 예술대 학생회나 독립언론과 연대했다.

『잠망경』은 독립언론으로 예산을 학교에서 지원받지 않고, 편집권은 학생들한테 있는 매체인데요, 이거 자체도 하나의 항의성 운동일 수 있죠. 저희가 하는 거는 **중앙대라는 척박한 땅에서 명확하게 이슈를 축적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요. 왜 이 대학이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이려고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대학의 목적이나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짚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태준)

자유인문캠프의 멘토 역할을 맡은 고부응 교수(중앙대 영문과)는 자유인문캠프에 대해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강의를 학생 스스로 강사를 섭외하고 기획하여 대안대학을 대학 ‘내’에서 모색”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또한, 김누리

교수(중앙대 독문과)는 “마지막으로 장악해서 안 되는 것이 대학의 인문학인데, 정치의 복원을 학생들 스스로 소수부터라도 시작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대안대학은 이미 많이 존재하지만, 대학 ‘내’ 대안대학이라는 점에서 자유인문캠프가 갖는 의미와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편, 대학에서 공론장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 경희대의 「미래대학리포트」 프로젝트이다. 경희대는 「경희대 미래대학리포트 2015-대학을 바꾸자 세계를 움직이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4년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 ‘미래리포트’라는 두 건의 대형 설문조사 프로젝트를 시행해 학생들을 대거 참여시켰다(재학생 2만5천여 명 중 1만5천여 명).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입체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FGI, 소설픽션, 다이어그램, 긍정탐구특강을 실시했다. 대학 발전전략 수립의 주체가 되었던 교수와 교직원 외에도 이전까지는 수혜자로서 이차적 존재였던 학생들까지 대학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끌어올렸다. 이 리포트에 나타난 경희대 학생들의 요구는 전공교육의 내실화와 사제관계의 회복으로 수렴되었는데, 리포트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이 갖춰야 할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새로운 대학평가지표(Global Eminence Index) 개발을 제안했다.

경희대 「미래대학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것도 위로부터의 개혁 아니냐, 교수님들이 지향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학생위원이라야 세 명밖에 없는데, 학생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거조차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수진)

중앙대 학생이 보기에 경희대의 사례(「미래대학리포트」, 후마니타스 칼리지 등의 제도)는 괜찮은 실험이죠. 문제는 총장이 바뀌면서 벌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다시) 총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은)

경희대의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를 ‘교양’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교양’은 유정완 학장의 말을 빌리면, “단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들은 강의 내용이 기억에서 사라졌다 해도, 강의를 들으며 확립했던 자아나 추구했던 가치들은 여전히 몸속에 남아 평생

자신을 지켜주는 무형의 자산으로서의 힘”을 말한다. 이러한 대학의 확고한 지향점은 ‘시민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전달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삶의 방향을 사고하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사고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대학의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학생들의 지적이다. 대학 1, 2학년 때는 청년들의 탈정치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다가 후마니타스 칼리지 수업을 들으며 사유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었다는 수진(여, 4학년)의 이야기에서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경희대에서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이 있는데, 경희대에서 ‘시민교육’이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보의 격차가 생겨서 ‘주인’이지만 대리인에게 다 위임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교육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시민이 되어서 나아갈 건지 1학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수진)

그러나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교육 내용과는 달리 비정규직 교수를 해고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형식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가 대학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알겠지만, 정작 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며, 결국 ‘인문학적 소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수하고 마는 다른 전공수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또한,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경희대 내부 전체의 합의가 아닌 총장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은 언제 교양수업의 내용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내비쳤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례들을,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하고 문제의식을 나눈다면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학을 바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탈정치화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자유로운 강의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수진(여, 4학년)의 주장은, 오늘날 대학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에 대한 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VI. 결론

VI. 결론

대학생들은 과연 현재 한국 대학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기업화 및 상업화 추세는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을까. 이 연구는 최근 대학의 변화가 대학교육의 질, 학생의 권리 및 복지, 학생의 삶과 생활세계 등 대학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심층면접과 FGI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지닌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봤다.

먼저 학생 대부분은 대학교육에 대해 고등학교의 교육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얕팍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대형강의가 점점 늘어나고 수업의 다양성과 질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은 대학수업의 의미를 '학점 취득'으로 축소하고 있다. 대학은 고등학교 때 이들이 경험했던 입시교육만큼 치열하고 경쟁적인 곳이 되었고, 대학 안에서 교양과 학문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사라지면서 대학은 그 역동성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또한, 학생복지는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 대학은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복지가 대학운영에서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적 인식이었다. 대학 진학에 따르는 비싼 등록금과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은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학생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끔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소한 복지 기회조차 단과대별, 학과별로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학생복지'가 학생 모두가 대학 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일정한 생활수준과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정책적·제도적 체계를 의미한다면, 학생들의 지적은 현재 대학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적인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그 어떠한 학생복지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준다.

대학 내 민주주의는 어떠할까. 급격한 기업식 구조조정을 경험한 대학의 일부 학생은 학내 민주주의에 대해, 학교 측의 ‘노조탄압식’ 학생통제로 자발적인 학생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학 내 이슈를 공론화할 장조차 부재하다는 사실과 학생의 목소리가 대학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은 점차 ‘침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은 ‘불안’의 공간이 되었다.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함께, 취업준비와 직결되지 않는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과 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문제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러한 대학생들의 ‘불안’에 편승하거나 이를 재생산하면서, 대학생 개개인이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이러한 불안에 대응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은 더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여러 암울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본래 의미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희망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대학사회와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내린 대학의 미래에 대한 일침을 참고해 볼 만하다. 이십 대 청년이 일상을 지탱하는 인식의 기반을 가지화하고 있는 오찬호는 “학생들의 생각이 구조의 문제를 따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려면 반드시 철학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피력한다(바꾸자대학포럼, 2015). 성찰적 접근으로 구체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대학의 문제가 현실사회의 동력 및 삶의 문제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건화는 대학이 ‘루저’로서의 청년이나 과거 운동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대안적인 삶으로서의 청년을 키워내는 경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바꾸자대학포럼, 2015). 학생, 본부, 교직원의 세 구조가 바뀌어야 대학을 혁신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김현미는 “대학이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합의적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인터뷰, 2015). 중요한 과제는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욕구만으로는 건드릴 수 없는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다.

학생들은 오늘날의 대학이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안의 조건을 이해하고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은 사회 내의 다양한 ‘권리’를 배우는 곳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취업 중심의 학교 분위기로 인해 다양한 사회진출의 가능성이 획일적인 경로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학생이 대학에서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체는 학생-자기 자신들-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학의 문제를 자신이 당장 개입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성향이 강했다. 그럼에도, 학생자치조직과 그 활동이 갖는 잠재적 가능성, 학내 공론장을 형성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의 소산물’이라고 평가받는 중앙대 학생들의 ‘자유인문캠프’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희대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등은 대학 구성원이 함께 연대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며 대학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있는 사례이다.

오늘날 대학은 학문적 지성과 비판적 사유의 공간이 아니라,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깊이 이식된 지배의 공간이자 공공적 자원을 착취하는 기계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구조조정에 따라 일률적인 대학평가 기준이 강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원감축 및 학과통폐합이 지방대학교, 기초학문, 비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경쟁의 공간이자 취업공장으로 변해버린 것이 현재 한국 대학의 풍경이다.

그럼에도 대학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학생들의 것이어야 할 자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하고, 비판적 지식과 삶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대학은 여전히 투쟁이 필요한 장소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의 연대와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대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문제에 개입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연구에서는 대학 커뮤니티 내에 만연한 학생들의 불안과 답답함, 특히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학생들조차 획일적인 사회진출 경로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많은 학생이 지적했듯 취업을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로 인해 다양한 사회진출의 가능성이 '대기업 취업', '공무원 시험' 등 획일적인 경로로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생각해보자. 이에 답답해하며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진출'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대학 내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이들테면,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며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와 대안적인 삶을 꿈꾸게 하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어떨까. '모든 것은 내 책임, 열정과 의지로 고통을 이겨내자'라는 자기계발 논리에 길든 이십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주어진 '기존의 길'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오찬호, 2013). 대부분 대학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지만, 이러한 기관의 활동은 '대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인 사회진출 경로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확장된 직업적 상상력과 어떠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몇 가지 지표만 따라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지금 소용돌이에 휘말린 대학의 개혁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은,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측면에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맹목적인 취업교육정책과 이에 대항한 인문교양 강화의 사이에서 보다 다양성 높은 사회진출 방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진출 교육’으로서 대안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당장 청년들이 겪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는 않겠지만,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모두가 획일적인 경로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불안을 어느 정도 상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실천과 개입을 통해,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해야 할 공부는 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원자화되어 연대할 수 없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진지하게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 대학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측면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그 해결이 어렵지만, 같은 이유로 대학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학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대학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소개하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분석했다. 대학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과 처방 없이는 ‘청년’들의 대안적 삶과 사회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대학교육연구소, 2015,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통계로 본 대학 교육비』.

[문헌]

고부용, 2010, “한국 대학의 기업화”, 『역사비평』 2010 가을호.

_____, 2013, “대학 순위평가와 대학의 몰락”, 『비평과 이론』 제18권 제2호.

김누리, 2009, “주식회사 유니버시티: 대학의 기업화와 학문공동체의 위기(I)”, 『안과밖』 27호.

_____, 2010, “영혼을 팔아버린 대학: 대학의 기업화와 학문공동체의 위기(II)”, 『안과밖』 28호.

김동애, 2010,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 선인.

김영·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김예슬, 2010, 『김예슬 선언』, 느린걸음.

류연미, 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청년 활동: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 활동가의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류지성, 박용규, 배성오 외, 2006, 『대학 혁신-7대 유형별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가분, 2015, “대학기업화 시대의 종언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문화/과학』 82호.

박원익, 2014, “대학공공성과 생활세계로서의 캠퍼스”, 자유인문캠프 오픈토크.

박중현, 2015, “대학과 교육의 본질 파헤치기-우리는 어떤 대학(생)을 필요로 하는가?”, 전남대학교 『용봉』 2015년 52호.

서동진, 2003, “백수, 탈근대 자본주의의 무능력자들: 속도의 삶으로서의 능력”, 『당대비평』 제23호.

서보명, 2011, 『대학의 몰락: 자본에 함몰된 대학에 대한 성찰』, 동연.

안수찬, 2011, “그들과 통하는 길”, 『사람과 정책』 Vol.1.

엄기호, 2009,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인문학의 눈으로 본 신자유주의의 맨 얼굴』, 낮은산.

_____, 2010,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푸른숲.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_____, 2015a, 『진격의 대학교: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 문학동네.

- _____, 2015b,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다”, 『문화/과학』 82호.
- 우석훈, 2007,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 유호근, 200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 『아태연구』 제16권 제1호.
- 유혜승·김지현·이민영, 2015,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희망리포트』 2015-01.
- 이동연, 2015, “신자유주의 대학과 학력자본의 재생산”, 『문화/과학』 82호.
- 이상룡, 2015,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고용구조”, 『문화/과학』 82호.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자료집』.
- 임재홍, 2015,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의 지배구조”, 『문화/과학』 82호.
-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헤이박스.
- 정민우, 2011, 『자기만의 방: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이매진.
- 정수남 외, 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문화와 사회』 12권.
- 정진희, 2012,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한국 대학의 변화”,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주, 2009,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대학등록금 1000만원, 청년실업 100만 명, 사회의 오해와 무관심』, 시대의창.
- 조우현, 2006, 『대학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랜덤하우스코리아.
- 데이비드 하비,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역, 한울.
- 마크 올순·존 코드·앤 마리 오닐, 201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세계화 · 시민성 · 민주주의』, 김용 역, 학이시습.
- 제니퍼 위시번, 2011, 『대학 주식회사: 대학의 상업화에 대한 심층 탐사 르포』, 김주연 역, 후마니타스.
- 클라이트 W. 바로우, 2011, 『대학과 자본주의 국가: 기업자유주의와 미국 고등교육의 개조 1894-1928』, 박거용 역, 문화과학사.
- 토모츠네 츠토무, 2015, “대학 · 학생의 채무화와 스튜던טיפ케이션”, 장수희 역, 『문화/과학』 82호.
- 프랭크 도너휴, 2014, 『최후의 교수들: 영리형 대학 시대에 인문학하기』 차익중

역, 일월서각.

헨리 지루, 2015, “신자유주의 대학에 대항하는 공공 지식인들”, 박현선 역, 『문화/과학』 82호.

[관련기사]

김형태, “20년 된 ‘5.31교육개혁안’, 이제는 바뀌어야한다”, 『오마이뉴스』, 2015.06.02.

주경복,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07.01.12.

손현경·차현아, “사회 트렌드 맞춰 인증도 달라진다”, 『한국대학신문』, 2015.05.10.

이우희, “[되짚어본졸업인증제] 시행 20년... 대학교육 강화 취지 퇴색”, 『한국대학신문』, 2015.05.10.

정아람, “라운드 테이블 패널 인터뷰: (3) 최철용 ‘자유인문캠프’”, 『OO그라운드』, 2014.03.14.

고두현, “대학생들이 만드는 ‘성찰하는 대학’”, 『블로터』, 2012.02.13.

윤지관, “고등교육이 무너지는 징후”, 『한겨레』, 2015.03.04.

한귀영, “청년담론이 감추는 것들”, 『한겨레』, 2015.10.18.

천관울, “‘대학 정원 감축’, 정부 칼 빼들었다”, 『시사인』, 2015.02.09.

정은희, “학생운동의 지구적 물결, 세계를 뒤흔든다”, 『참세상』, 2010.08.08.

권소현, “경제 뇌관 될 학자금 대출”, 『이데일리』, 2015.09.02.

박계현, “‘취준생 허리휘는’ 대학등록금 10년간 40% 올랐다”, 『머니투데이』, 2014.02.14.

최성욱, “[청장년 실업이 문제다] 2. 불운한 20대”, 『한국일보』, 2000.12.26.

주진우, “‘대학 5학년’ 대한민국의 슬픈 초상”, 『시사인』, 2009.01.12.

유정인·박은하, “[복지국가를 말한다](1부)②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경향신문』, 2011.05.11.

김기환 외, “대학 진학 OECD 1위인데... 대졸 10명 중 4명 취업 못 해”, 『중앙일보』, 2014.03.05.

홍석재, “송아지 24마리 팔아 졸업하니 백수... ‘헬조선’의 대학생들”, 『한겨레』, 2015.09.09.

희망리포트 [2016-02]

[바꾸자대학 프로젝트]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발행인 박재승

편 집 희망제작소 희망기획팀

디자인 안영삼

발행일 2016년 3월

발행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1026

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03008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